



**노숙위기청년 실태조사 및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

노숙위기청년 실태조사 및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

# 노숙위기청년 실태조사 및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송 아 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윤 여 원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지 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김 성 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김 예 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김 찬 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 본 연구는 (재)아름다운재단과 (사)희망가치가 업무협약을 통해 수행하는  
'2025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 본 보고서는 요약본으로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발 행 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발 행 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 백양관 5층 산학협력단

TEL 02-2123-6500 | FAX 02-2123-8180

홈 페이지 <https://research.yonsei.ac.kr/>

발 행 2026년 3월

---

---

# 목 차

---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5
<b>제2장 청년 주거 안전망의 공백과 정책 개선과제</b> .....	<b>9</b>
제1절 청년 주거빈곤 연구와 주요 쟁점	11
제2절 노숙위기와 노숙의 관계	12
제3절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한계: 노숙위기청년의 배제	13
제4절 노숙인 지원 체계의 한계: 노숙청년을 위한 정책 부족	15
제5절 민간 영역의 실천적 대안: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17
<b>제3장 노숙위기청년 실태 분석</b> .....	<b>21</b>
제1절 노숙위기청년 실태조사 개요	23
제2절 노숙위기청년 실태조사 결과	24
<b>제4장 노숙위기청년 사례 분석</b> .....	<b>37</b>
제1절 노숙위기청년 사례 심층 분석	39
제2절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종사자 사례 분석	50
<b>제5장 통합적 자립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제안</b> .....	<b>59</b>
제1절 청년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61
제2절 자립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4
제3절 민간 협력을 통한 정책 확장과 사업 발전 방향	67
<b>참고문헌</b> .....	<b>71</b>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 제1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경제적 빈곤, 급격한 주거비 상승, 고용시장 불안정은 청년층의 주거권을 위협하며, 단순한 주거빈곤을 넘어 실질적 노숙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원가족의 지지체계가 부재하거나 해체된 청년은 주거 상실 시 거리노숙뿐 아니라 고시원·찜질방·PC방 등 비적정 주거로 빠르게 유입되는 경향을 보인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거리노숙 경험 비율은 45.3%로 고령층보다 월등히 높았고, 노숙인 이용시설 이용자 비율도 20.0%로 나타났다. 또한 40세 미만 집단은 거리노숙 계기로 가정폭력 10.2%, 신용불량 및 파산 11.5%, 주거지 상실 20.2%, 사회복지시설 퇴소 2.3%, 교정시설 출소 2.1%,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 2.1%를 보여 중장년층과 다른 위기 경로를 드러냈다. 지적장애 비율은 68.7%, 정신장애 비율은 18.0%, 병원·사회복지시설 장기 거주 경험은 8.0%로 나타나 정신건강과 제도적 취약성도 두드러졌다. 고용 상태와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도 청년 노숙인은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근로능력 있는 미취업자’ 비율은 33.9%로 40대(26.5%)나 50대(18.9%)보다 높았으며, 최근 4주 내 구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0세 미만 집단이 29.4%로 나타나 40대(22.4%), 50대(12.2%), 60대(7.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청년 노숙인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는 존재하나 안정적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사회적 관계 상태를 살펴보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청년 노숙은 기존의 노숙인 서비스나 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성과 욕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의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매우 적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의 면접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응답자 1,452명 가운데 청년 노숙인(40세 미만)은 약 6.0% 수준으로 약 87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쳐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 노숙은 전체 252명 중 2.4%(6명), 이용시설은 전체 70명 중의 23.5%(16명), 생활시설은 전체 1,130명 중 5.5%(62명)이 40세 미만의 청년 노숙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노숙인 실태조사는 거리노숙인, 노숙인 시설 이용자, 쪽방주민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PC방, 찜질방, 지인 거주지 등 비공식적 거쳐에 머무르는 노숙위청년들이 조사에 충분히 포착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년 노숙인은 실제 규모에 비해 실태조사에서 과소 포착될 가능성이 있으며, 청년 노숙 문제에 대한 별도의 연구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숙인 연구 및 정책 분야에서 청년이란 연령집단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및 주거정책에서도 노숙위기 청년은 적극적인 정책 대상으로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청년 주거정책 전반에서도 노숙이란 극단적 주거위기를 경험하는 청년들에 대한 별도의 접근 전략이 부재하며 노숙위기 청년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청년 주거정책은 이들에게 접근 가능한 정책 및 서비스 체계가 아니다.

기존 논의들이 주로 일반 청년층의 주거빈곤이나 노숙인 전체의 실태를 다루거나 노숙위기 청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노숙위기'라는 경계에서 있는 청년들의 삶을 주거, 건강, 관계망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를 위해 노숙위기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년 노숙인의 현실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민간지원 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 위에서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2절 |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주거불안정으로 인해 노숙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의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민간의 주거지원 사업이 이들의 삶에 미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질적연구, 양적연구를 병행하였다.

###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청년 주거빈곤과 노숙위기의 개념적 범주와 발생 맥락, 그리고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청년 주거빈곤, 청년 노숙, 주거불안정과 관련된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정책 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청년 주거빈곤과 노숙의 개념과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주거위기가 어떠한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논의되어 왔는지, 그리고 주거빈곤과 노숙이 학술적으로 어떻게 구분되고 설명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청년 노숙의 발생 경로, 생애주기적 특성,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요인들이 연구에서 어떻게 분석되어 왔는지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청년 주거지원 정책과 노숙인 지원체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 정책 자료와 제도 안내 문서, 관련 연구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유형과 대상 기준, 그리고 노숙인 지원 정책의 주요 서비스 구조를 정리하고, 두 정책 영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과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헌 검토는 본 연구에서 노숙위기 청년을 위한 주거 중심 통합지원 모델의 필요성과 분석 관점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 2. 질적연구

질적연구는 노숙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주거 확보의 어려움, 의료 서비스 접근의 제약, 사회적 관계 단절의 맥락과 욕구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론은 Creswell(2013)의 일반적 질적 조사(General Qualitative Inquiry) 관점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였다. 이 방법론은 사회적 현상에

내재된 의미와 맥락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기에 적합하여, 청년 개인의 요인뿐만 아니라 비적정 주거 환경, 제도적 조건 등의 구조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질적연구를 위한 인터뷰는 (재)아름다운재단과 (사)희망가치의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17명과 청년주거지원 사업 관련 실무자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개별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조사 대상자인 노숙위기청년은 심리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고려하여, 노숙 및 복지 분야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이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상담적 태도를 유지하였고, 참여자가 인터뷰 중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불편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수집된 질적 자료는 노숙위기청년을 위한 주거 중심 통합지원 모델을 설계하는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 3. 양적연구

양적연구는 주거위기 및 노숙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의 생활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집단 간 욕구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양적연구는 노숙위기청년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실태조사는 조사업체 소속 조사원과 연구진이 노숙위기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방문하여 참여 의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활용한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항목에는 주관적 건강 상태와 의료 대응 방식, 거주 상황,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가족 및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망, 경제활동 현황 등이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생활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양적 분석 결과는 질적연구에서 도출된 경험적 자료와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노숙위기청년의 생활 특성과 정책적 욕구를 이해하고 주거 중심 통합 지원모델을 설계하는 실증적 근거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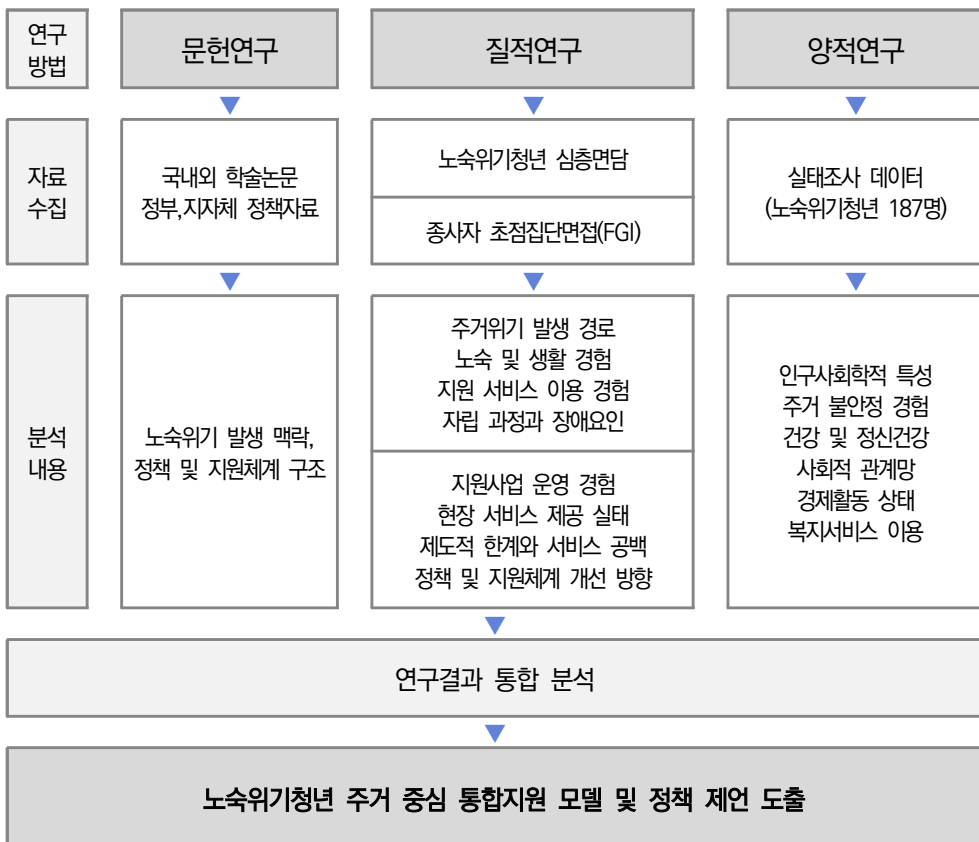
### 4. 연구윤리 준수 사항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보호와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생명윤

리위원회(IRB)의 승인을 획득한 후, 엄격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었다(승인번호 7001988-202512-HR-3071-03). 특히 주거 불안정 및 노숙 경험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인터뷰 도중 참여자가 불쾌감이나 심리적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 즉시 면담을 중단하고 철회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였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익명화 및 가명 처리하여 관리하였으며, 참여 보수 지급을 위해 수집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의 개인식별정보는 행정 처리가 완료된 후 폐기하였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익명화 및 가명 처리되었으며, 모든 연구 자료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캐비닛과 암호화된 폴더에 보관하여 연구 종료 3년 후 완전히 파쇄 및 삭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 결과 공개 시 참여자의 식별 정보를 완전히 배제하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표 1-1〉 연구방법 및 분석 내용





## 제2장

# 청년 주거 안전망의 공백과 정책 개선과제

청년 주거빈곤 연구와 주요 쟁점

노숙위기와 노숙의 관계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한계: 노숙위기청년의 배제

노숙인 지원 체계의 한계: 노숙청년을 위한 정책 부족

민간 영역의 실천적 대안: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 제1절 | 청년 주거빈곤 연구와 주요 쟁점

청년 주거빈곤은 단순한 주거지 부재를 넘어, 불안정한 주거 이동,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의 질이 중첩된 다차원적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해외 연구는 특히 전환기 청년이 기존 주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노숙과 임시거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정성에 주목해 왔으며(de Pass et al., 2023), 이에 따라 사후 대응보다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그 가운데 청년 특화형 ‘Housing First for Youth’ 모델은 주거 안정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개입으로 제시되고 있다(Woodhall-Melnik et al., 2025). 국내 연구도 청년 주거빈곤을 단순한 소득 부족이 아니라 소득·교육·주거비 부담이 중첩된 복합적 결핍으로 파악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이은정 외, 2024), 이러한 중첩 결핍은 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난다(서채민 외, 2024). 또한 청년기 주거 결핍은 생애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므로, 단기 구제를 넘어 생애 설계와 자립 지원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미혼 독립가구의 빈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독립 페널티’ 현상이 확인되면서, 청년 주거빈곤이 자립 이행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구조적 문제임이 강조되고 있다(김수정, 2020).

청년 주거빈곤의 주요 쟁점은 거시경제 구조와 주택시장 변화, 주거의 경제적·물리적 적정성, 그리고 정책 실효성으로 요약된다. 먼저 팬데믹 전후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실질 주택가격·임대료 상승은 주거 불안을 심화시켰으며(Cournède & Plouin, 2022), 규제 임대 축소와 시장 자유화는 청년을 고비용·단기 계약의 민간임대로 내몰아 부모 자산에 따른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Howard et al., 2024). 또한 주택의 금융화는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한다(Kährlik & Pastak, 2023). 다음으로 주거빈곤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나 비주택 거주를 포함한 경제적·물리적 결핍의 누적으로 이해되며(최은영·이봉조, 2014),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Acolin & Reina, 2022)과 과밀·설비 부재로 대표되는 주거 박탈(Stephens & Leishman, 2017)은 청년의 신체·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과 같은 취약집단에서는 낮은 주거의 질이 자살 생각 수준 과다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천화진 외, 2025). 마지막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정책 수혜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주거빈곤 완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며(김민정, 2023), 단기 월세 지원을 넘어 적정 주거를 권리로 보장하는 제도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박애리 외, 2017).

## 제2절 | 노숙위기와 노숙의 관계

청년의 주거불안정은 심화될 경우 노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노숙위기와 노숙은 상호 단절된 현상이 아니라 주거 불안정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청년 노숙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개인이 거리, 쉼터, 비상 거처에서 생활하거나 위험하고 부적절한 주거지에 살면서 즉각적으로 이탈할 전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Pedersen et al., 2016; Sadauskas & Kewoh-Vainio, 2024). 한편, 형식적인 주거지가 존재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노숙 상태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불안정 주거(precariouly housed)’ 상태 또한 노숙위기의 핵심 범주에 포함된다(Aubry et al., 2021). 국내 연구에서도 노숙은 단순한 거처 상실이 아니라 빈곤, 주거 상실, 사회적 관계망과 자원 결핍이 중첩된 상태로 설명되며(구인회 · 김소영, 2012), 청년 노숙은 성년기 독립 이행의 극단적 실패로 이해된다(김소영, 2017a). 즉, 주거빈곤이 물리적 · 경제적 결핍을 뜻한다면, 노숙은 여기에 사회적 연결의 단절과 고립이 더해진 상태로 볼 수 있다.

최근 연구는 노숙 여부 자체보다 주거 불안정이 어떻게 실제 노숙으로 이행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Frederick et al.(2014)은 주거안정을 주거 유형, 이력, 점유권, 재정, 법적 지위 등 여러 차원의 위협 수준에 따라 안정-불안정의 연속체로 재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카우치 서핑이나 과밀, 부적절한 숙소 의존도 주요한 주거빈곤 양상으로 간주된다(Woodhall-Melnik et al., 2025; Sadauskas & Kewho-Vainio, 2024). 그러나 실제로 노숙위기에서 청년 노숙으로 이행하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존 연구는 학대, 폭력, 비행, 사회경제적 자원의 단절과 같은 생애사적 취약성이 노숙 위험을 증폭시킨다고 보고하며(Pophaim & Peacock, 2021), 국내에서도 청년 노숙인의 상당수가 폭력과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영, 2016). 또한 주거빈곤은 우울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그 영향이 커지는 만큼, 주거 지원은 물리적 공간 제공을 넘어 관계망 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전진호 외, 2025). 이에 따라 독립 공간과 사회적 연결을 결합한 ‘느슨한 공동체’ 모델이 대안적 지원 방향으로 주목되며, 청년 노숙위기는 시장 구조, 생애사적 취약성, 관계망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제3절 |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한계: 노숙위기청년의 배제

### 1. 청년 주거지원 정책 현황

청년 노숙은 주거불안정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주거위기가 심화되면 안정적 거처를 상실한 노숙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청년 주거정책은 주거비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위기 청년의 노숙 진입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일정한 소득이나 고용 상태를 전제로 설계되어, 정작 노숙 및 노숙위기 청년이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청년 주거정책은 2015년 「주거기본법」,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 2018년 청년 주거지원방안, 2020년 「청년기본법」을 거치며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공공부문에서는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 월세 지원, 전세대출, 주거상담소, 긴급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와 지역 주거복지센터도 상담, 주거환경 개선, 이사비·보증금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청년 주거권 보장과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 세입자 권리 보호와 상담, 정책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나의 집은 청년쉐어하우스 운영과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극단적 위기 청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는 ‘주거 우선(Housing First)’ 원칙에 기반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2.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한계

### 1) 독립 가구 미인정 및 세대분리법의 장벽

현행 제도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미혼·미취업 상태의 만 30세 미만 청년을 독립가구로 인정하지 않아, 가정폭력·가출 등으로 가족과 단절된 노숙위기청년이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최은희·김은빈, 2024).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청년 가구분리 시범사업이 도입되어 19~29세 미혼 청년의 수급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김은빈·최은희, 202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도 부모와 청년에게 보장액을 분리 지급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지역 제한, 가족관계 단절 입증, 부정 수급 방지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 2) 사후적 성격의 정책

현행 청년 주거지원정책은 성인 이전의 예방적 준비보다, 청년이 이미 주거위기에 처한 뒤 이를 보완하는 사후적 대응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청년은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취업 실패, 불안정 노동, 낮은 소득 등 구조적 문제로 열악한 주거상태가 고착되기 쉽고(박미선, 2021), 특히 노숙위기청년은 원가족 지원 없이 독립하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어려움도 함께 겪는다(김소영, 2017). 결국 부모 지원 여부에 따라 자립 격차와 불평등이 발생하지만, 이를 예방하고 지원할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 3) 물리적 공간 중심의 지원과 포괄적 서비스의 부재

현재 청년 주거지원은 주거비 완화, 근로 지원, 주택 공급 등 물리적 지원에 치우쳐 있으며, 주거불안으로 인한 우울, 자살 생각, 스트레스 등 심리·정서적 위기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 선행연구는 노숙 및 강제 퇴거(남원석, 2013; Marcal & Barr, 2024; 이은정 외, 2024), 비주택 거주(김은지 외, 2023; 이은정 외, 2024), 열악한 주거의 질, 주거비 부담, 임대인과의 갈등이 공통적인 주거불안정 요인임을 보여준다. 즉, 주거 확보 이후에도 열악한 환경, 잦은 이동, 불안정한 계약으로 만성적 주거불안정이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청년의 높은 주거불안정은 우울과도 연결된다(이은정 외, 2024). 따라서 주거 제공을 넘어 사례관리와 정서적 회복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 제4절 | 노숙인 지원 체계의 한계: 노숙청년을 위한 정책 부족

### 1. 노숙인 지원체계 현황

국내 노숙인 복지정책은 「노숙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숙 예방부터 권익 보호와 사회복귀까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주거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정책은 국가의 보호와 개인의 자립 노력을 함께 강조한다. 또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주요 지원 사업은 시설을 통한 일시 보호, 장기 자립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비정형 거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 주거비 지원(월 34만 원, 최대 6개월)으로 구성되며, 주민등록 복원과 수급권 연계 등 사례관리를 병행한다. 의료지원은 의료급여 1종을 중심으로 하되 주로 시설 보호 대상자에 한정되고, 응급상황이나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는 현장 처치와 응급 이송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자활·재활·요양시설 운영, 직업훈련과 임금보조, 결핵 검진과 예술치료 등 맞춤형 사업을 통해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행 지원체계는 법과 계획상 청년 노숙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청년 대상 지원의 독자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종합계획은 청년 노숙인 보호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제2차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2021)’도 위기 발굴과 심리 지원, 맞춤형 자립·주거 지원, 실태조사 정교화의 3대 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역할이 분산되어 현장에서는 책임이 분산되고, 청년 전담 시설과 구체적 운영지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원이 상시 인프라보다 연계·공모사업 방식에 의존해 지속성이 낮고, 일반 노숙인 사업에 청년 명칭만 덧붙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전담 예산과 전용 공간이 부족해 청년이 중장년층과 혼재된 시설에서 생활하는 현실은, 청년의 생애주기와 낙인 회피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2. 청년 노숙인이 배제된 정책

### 1) 숨어있는 '청년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노숙인 정의는 주로 거리나 시설 거주자에 국한되어 있어, 고시원, PC방, 여인숙 등 비적정 주거를 전전하는 다수의 20-30대 청년 노숙인을 정책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낙인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는 노숙인처럼 보이지 않으려 하며, 일반 청년정책과 노숙 인정책 모두에서 배제되기 쉽다. 특히 청년 노숙인은 고학력 비율이 높고, 가정폭력 등 원가정 해체를 배경으로 노숙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범죄 피해, 우울, 의료서비스 미이용, 채무 문제 등 복합적 위험에 놓여 있어 안전과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 2) 청년 노숙유입 경로의 특성 고려 부재

현행 청년 주거지원정책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청년이 어떤 경로로 노숙위기에 유입되는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많은 청년은 아동양육시설 퇴소, 가정폭력, 가족 갈등 등으로 준비 없이 독립을 강요받고, 가족 지지 없이 자립을 시작한다. 이후 쉼터,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단기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소득 대부분이 당장의 주거비와 생활비로 소진되어 안정적 자립이 어렵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일정 소득과 증빙이 가능한 청년 중심이어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비적정 주거에 머무는 위기 청년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 3) 여성 및 취약 집단의 특수성 배제와 안전 문제

청년 노숙 집단 내부에도 성별과 취약성에 따라 배경과 욕구가 다르지만, 현행 정책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 청년은 임금 격차와 고용 불안정, 가정폭력·성폭력 등 젠더폭력과 결합된 주거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원은 단기적이고 피해 유형별로 분절되어 있어, 퇴소 후 다시 불안정한 주거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여성 전용 시설도 매우 부족하고, 부처 간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과 위기 청년을 위한 안전한 장기 주거와 통합적 사례관리, 일원화된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 제5절 | 민간 영역의 실천적 대안:

#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 1.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의 개요

### 1) 사업 추진 배경

기존 청년 주거정책은 대학생이나 취업 청년 중심으로 설계되어, 탈가정 경험이 있거나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 사회적 지지 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 노숙인 지원체계 역시 중·장년층 중심이어서 청년 노숙인의 생애 주기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청년은 거리 노숙보다 PC방, 사우나, 24시간 매장, 지인 집 등을 전전하는 '은폐된 노숙' 형태가 많아 공공 지원체계에서 포착되기 어렵고, 그 결과 주거 불안정이 장기화되거나 반복적 노숙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아름다운재단은 공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위기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긴급 주거지원과 사례관리를 결합한 통합적 지원을 통해 노숙 진입을 예방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공공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 차원의 실천적 대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2) 사업 내용

본 사업은 가정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워 노숙상황 및 노숙위기군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만18세부터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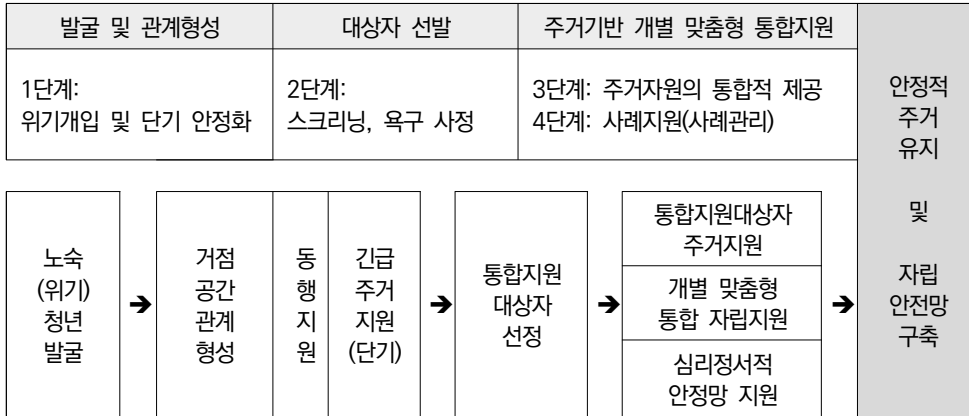
#### 가. 노숙상황

- 현재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일정한 주거지 없이 pc방, 사우나, 24시간매장,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청소년일시쉼터, 모텔, 타인의 집 등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의 청년

#### 나. 노숙 위기

- 현재 노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거위기 사각지대에서 노숙상황으로 내몰릴 위험이 높은 위기군에 해당하는 청년(고시원, 달방(모텔, 여인숙 장기거주), 쪽방 거주자 등
- ※ 이외에 주거지 퇴거 위기 등 불안정한 주거상황에 놓여있는 청년

〈표 2-1〉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지원 단계



### (3)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운영 방식

#### ① 거점 공간 운영을 통한 관계 형성

본 사업은 노숙위기청년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청년주거지원센터 <청년, 공간>’ 을 주 5일 운영하며, 필요 시 주말·공휴일에도 추가 개방한다. 이를 통해 발굴된 청년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여 공공정책 연계, 긴급 주거지원, 집중 사례지원으로 신속히 연결한다. 공간에서는 상담과 함께 샤워, 세탁, 식사, 휴식 등의 일상 지원과 자립 교육, 커뮤니티 활동을 제공한다.

#### ② 동행 지원

공공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정보 부족이나 접근 문제로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정보 제공과 현장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서 작성, 서류 준비, 공공기관 상담, 부동산 및 고시원 확인 등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긴급 의료비·숙소비·교통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 ③ 긴급 주거지원(단기)

노숙 상황이나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청년에게 단기 임대료를 신속히 지원해 즉각적인 탈노숙과 2차 위기 예방을 도모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3개월, 최대 6개월이며, 공공 자원이나 집중 사례지원 단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1인당 최대 180만 원 범위에서 고시원 보증금·월세 및 긴급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 ④ 통합 지원 대상자 (주거 지원)

공공 자원 연계가 어렵거나 장기 지원이 필요한 청년은 통합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1년간 주거를 지원한다. 1인당 최대 1,420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관리비 600만 원과 가전·가구 구입비 최대 200만 원, 공과금 및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거주 기반을 마련한다.

#### ⑤ 통합 지원 대상자 (개별 맞춤형 통합 자립 지원)

주거 지원 이후에도 청년이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년간 맞춤형 자립 지원을 제공한다. 1인당 최대 420만 원 이내에서 학업·직업훈련비, 의료비 등 연 240만 원의 통합 지원금과 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제공하여 소득 기반 형성과 생활 안정을 돕는다.

#### ⑥ 심리·정서적 안전망 지원

노숙위기와 연관된 우울, 수면 문제, 경계선 지능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시 전문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연계나 상담·치료비 지원을 통해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는다. 또한 전문 상담치료 지원 외에도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해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 기존 민간 사업과의 차별성

아름다운재단의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18~34세 청년 중,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이 부족한 노숙·노숙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거리 노숙뿐 아니라 PC방, 사우나, 모텔, 타인의 집 등을 전전하는 경우와, 고시원·쪽방 거주나 강제 퇴거 위험 상태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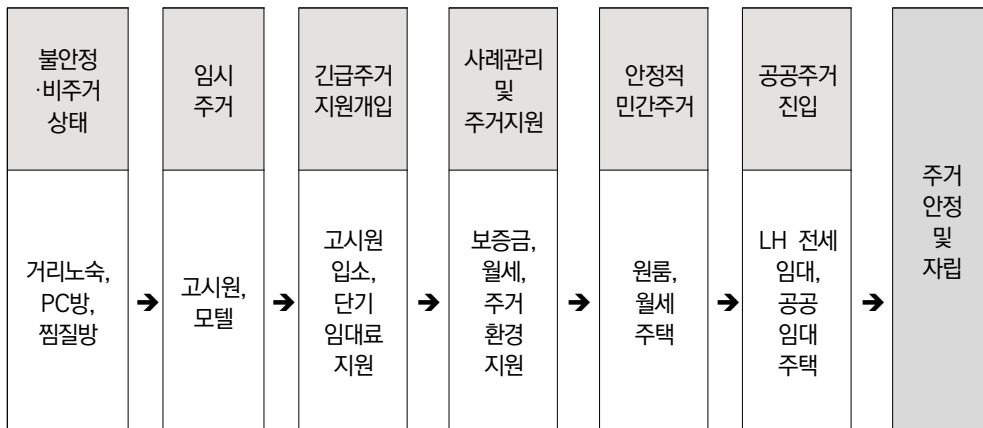
사업은 위기개입, 주거지원, 자립지원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아웃리치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거점 공간에서 관계를 형성한다. 이후 공공자원 연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행 지원을 제공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단기 임시 주거와 주거비를 지원한다. 장기 지원이 필요한 청년은 통합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보증금, 월세, 주거환경 조성비 등 주거지원을 받고, 교육비·의료비·심리상담 등 맞춤형 자립지원도 함께 제공받는다. 또한 커뮤니티 활동과 상담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과 정서적 안정도 지원한다. 즉, 이 사업은 단순 주거비 지원을 넘어 사례관리와 심리·사회적 지원을 결합한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 2.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의 성과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참여 청년들이 실제로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는 '주거상향' 경험을 보였다는 점이다. 주거위기 청년들은 초기에는 거리노숙, 노숙인시설, 고시원·모텔 등 임시적 거처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 사업의 긴급주거지원과 통합지원이 단계적으로 제공되면서 일부는 보다 안정적인 주거 형태로 이동하였다. 사업을 통해 발굴된 노숙위기청년은 동행지원 79명, 긴급지원 52명, 통합지원 15명이었다.

실제로 노숙 또는 불안정 거처에 있던 청년들이 긴급지원으로 고시원 등 단기 거처에 입주한 뒤, 사례관리와 주거비 지원을 통해 원룸이나 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로 옮겨가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월세, 주거환경 조성비 지원과 함께 공공주거정책 연계를 위한 동행지원과 사례관리가 병행되었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 마련 이후에는 교육비, 취업 준비 지원, 심리상담, 법률/노무상담 등 개별 맞춤형 자립지원이 제공되어 장기적 독립생활의 기반 형성에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주거비 지원을 넘어, 불안정 주거 상태의 청년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단계로 이동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하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아름다운재단의 사업은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주거상향 경로를 만드는 실천적 지원 모델이며, 향후 청년 노숙 정책에서 주거지원과 자립지원을 결합한 통합모델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표 2-3〉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주거상향 과정



## 제3장

# 노숙위기청년 실태 분석

노숙위기청년 실태조사 개요

노숙위기청년 실태조사 결과



## 제1절 | 노숙위기청년 실태조사 개요

### 1. 노숙위기청년 실태조사 개요

#### 1) 목적 및 대상

본 조사는 주거 불안정으로 노숙위기에 놓인 청년들의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자립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높은 주거비와 고용불안, 아동·청소년기 학대·방임, 가정해체 등이 성인기 주거 상실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하고, 청년층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 및 지원체계 개선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자는 법적 ‘노숙인’ 개념을 넘어 ‘노숙위기청년’이라는 확장된 개념을 적용하여 만 18~34세 청년으로 설정하였다. 거리생활뿐 아니라 PC방, 찜질방, 24시간 매장, 일시보호시설, 생활시설, 고시원 및 무보증 월세 등 다양한 불안정 주거 형태를 포함하여, 청년 주거위기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방법 및 문항

조사는 2026년 1월 한 달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연구진 주관, 리서치앤리서치 수행으로 진행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온라인 자가기입과 오프라인 대면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청년주거지원센터 <청년, 공간>과 보현종합지원센터 등의 협조를 통해 유의표집과 눈덩이표집 방식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189명을 조사하였고, 중복응답 2건을 제외한 187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는 IRB 승인과 참여자 동의를 거쳐 수행되었다.

설문은 총 7개 영역, 9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관계망, 건강 및 정신건강, 거주 현황과 주거 이동 이력, 경제활동과 수입,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욕구 등이며, LSNS-18, K-AUDIT, FTND-K, DAST-10, CES-D 11 등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해 관계망, 중독, 정신건강, 자립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노숙위기의 원인과 특성, 지원 수요를 다각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제2절 | 노숙위기청년 실태조사 결과

### 1. 응답자 특성 및 사회적 관계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숙위기청년은 오프라인(39명), 온라인(150명)으로 총 189명이었으며, 그 중 중복응답 2건을 제외한 187명의 응답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187명 중 여성이 55.6%(104명)로 남성 44.4%(83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4.7%로 과반수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30대(34.8%), 10대(0.5%)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8.7%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이하가 45.5%, 중학교 졸업 이하가 5.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96.3%)과 자녀없음(96.8%)이 대다수였다. 주거 특성에서는 고시원 및 무보증 월세 거주가 59.9%로 다수의 청년이 불안정한 비적정 주거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제적 여건은 최근 한 달간 월 소득(n=181)이 51~100만 원인 집단이 4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50만 원 이하가 26.0%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66.9%가 월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79.7%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채 규모는 500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았지만 3000만 원 이상 고액 부채도 22.1%에 달했다.

거주유형별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187명 중 고시원 및 무보증 월세 거주가 59.9%로 가장 많았고, 거리생활 17.1%, 이용시설 17.6%, 생활시설 5.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 노숙·주거위기는 전형적인 거리노숙보다 불안정 거처와 시설 이용 형태로 더 많이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거리생활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은 남성과 20대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남성의 거리생활 비율은 24.1%로 여성(11.5%)보다 2배 이상 높았고, 20대는 20.7%로 30대(10.8%)보다 높아, 젊은 남성 청년이 거리노숙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별거·이혼(66.7%)이나 동거 경험자(50.0%)에서 거리생활 비중이 높아, 가족관계의 불안정이 거리노숙 위험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표 3-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N=187, 단위: 명, %

구분	계		구분	계	
전체	187	100.0	거주유형		
성별			거리생활	32	17.1
남성	83	44.4	이용시설	33	17.6
여성	104	55.6	생활시설	10	5.3
연령			고시원 및 무보증 월세	112	59.9
10대	1	0.5	최근 한달 월소득 (n=181)		
20대	121	64.7	소득 없음	11	6.1
30대	65	34.8	50만원 이하	47	26.0
최종학력			51~100만원	74	40.9
중학교 졸업 이하	11	5.9	101~150만원	31	17.1
고등학교 졸업 이하	91	48.7	151~200만원	10	5.5
대학교 재학 이상	85	45.5	200만원 초과	8	4.4
혼인상태			부채 유무		
기혼	2	1.1	부채 있음	149	79.7
미혼	180	96.3	부채 없음	32	17.1
동거	2	1.1	모름	6	3.2
별거 및 이혼	3	1.6	부채 금액 (n=149)		
자녀 유무			500만원 이하	46	30.9
자녀 있음	6	3.2	501~1000만원	29	19.5
자녀 없음	181	96.8	1001~2000만원	20	13.4
주민등록현황			2001~3000만원	21	14.1
현 생활하는 지역에 등록	93	49.7	3000만원 이상	33	22.1
이용 또는 입소 시설에 등록	15	8.0			
다른 지역에 등록	34	18.2			
거주불명 등록	22	11.8			
말소 또는 출생등록 없음	20	10.7			

주: 최종학력 중 대학교 재학 이상은 대학교 중퇴,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이상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표 3-2〉 거주유형별 응답자 특성

N=187, 단위: 명, %

구분		전체		거리생활		이용시설		생활시설		고시원 및 무보증 월세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87	100.0	32	17.1	33	17.6	10	5.3	112	59.9
성별	남자	83	100.0	20	24.1	10	12.0	4	4.8	49	59.0
	여자	104	100.0	12	11.5	23	22.1	6	5.8	63	60.6
연령	10대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20대	121	100.0	25	20.7	23	19.0	6	5.0	67	55.4
	30대	65	100.0	7	10.8	10	15.4	3	4.6	45	69.2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	100.0	2	18.2	4	36.4	1	9.1	4	36.4
	고졸 이하	91	100.0	18	19.8	19	20.9	6	6.6	48	52.7
	대학재학 이상	85	100.0	12	14.1	10	11.8	3	3.5	60	70.6
혼인상태	기혼	2	100.0	0	0.0	1	50.0	0	0.0	1	50.0
	미혼	180	100.0	29	16.1	32	17.8	9	5.0	110	61.1
	동거	2	100.0	1	50.0	0	0.0	0	0.0	1	50.0
	별거 및 이혼	3	100.0	2	66.7	0	0.0	1	33.3	0	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6	100.0	1	16.7	2	33.3	1	16.7	2	33.3
	자녀 없음	181	100.0	31	17.1	31	17.1	9	5.0	110	60.8

## 2)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조사대상자들이 노숙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하였는지 (동거여부)를 묻고, 대상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의 질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위기 발생 직전 상당수가 가족과 물리적·정서적으로 분리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다. 아버지와 관계를 살펴보면, 비동거 비율이 53.5%로 나타나 이미 과반이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동거 중인 경우에도 관계가 ‘나쁨’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31.0%에 달해, 함께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지 체계로서의 역할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거리생활 집단에서 아버지와 비동거 및 관계 단절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아버지와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밀한 양상을 띠었다. 동거 비율은 62.0%로 아버지보다 높았으며, 관계의 질 또한 ‘ 좋음 ’ 이상의 긍정적 응답이 45.7%로 조사되어 정서적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와

동거하는 청년 중에서도 20.2%는 갈등 관계에 놓여 있어 모자 관계 내 불안정성도 존재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에서 어머니와의 유대감이 가장 높았으나,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오히려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연락 빈도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

### 3) 사회적 관계

노숙위기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 인원수(교류 범위)를 가족·친척과 친구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가족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더 많이 유지하고 있었지만, 가족·친구 모두와의 사회적 고립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가족·친척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63.1%, 친구는 35.3%였으며, 친구는 가족보다 상대적으로 관계망이 더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거주유형별로는 거리생활 청년의 고립이 가장 심각했다. 이들은 가족과 연락이 전혀 없는 비율이 81.3%, 친구와도 연락이 없는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다. 반면 고시원·무보증 월세 거주자와 생활시설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관계 단절 비율이 낮아, 특히 생활시설은 일정한 사회적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고립 수준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남성은 가족·친구 모두와의 연락 단절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고, 특히 친구 관계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과의 접촉 빈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으며, 친구와의 접촉도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종합하면 노숙위기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전반적으로 취약하며, 특히 거리생활 청년과 남성, 30대에서 고립 위험이 더 높았다. 따라서 주거지원과 함께 친구·지역사회·사례관리자 등을 통한 대안적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건강 및 정신건강 실태

### 1) 주관적 건강상태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9.8%가 자신의 건강을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평가했으며, 평균 점수도 5점 만점에 2.48점에 그쳤다. 거주유형별로는 거리생활 집단의 건강 취약성이 가장 심각했다. 거리생활 청년의 68.8%가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평균 점수도 2.1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프거나 다쳐도 병원을 이용하기보다 참고 버티는 경향이 강했다. 전체의 42.2%가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응답했고, 약국 이용과 개인 병·의원 진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공공의료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거리생활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져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지원과 함께 건강·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2) 중독 및 정신건강

노숙위기청년들의 음주·흡연·약물 오남용이 일부 취약집단에 집중되어 나타났고, 특히 남성, 거리생활자, 저학력층, 30대에서 위험 수준이 높았다.

먼저 음주 실태를 보면, 전체의 43.3%는 비음주자였지만 음주자 중에서는 폭음과 음주 통제 실패가 두드러졌다. 10잔 이상 마시는 폭음 비율은 22.6%였으며, 거리생활자, 남성, 30대, 중졸 이하 집단,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음주를 자제하기 어려웠다는 응답도 과반(57.5%)에 달했고, 음주로 인해 일상적 과업 수행에 실패한 경험도 54.7%로 높았다. 특히 이용시설 이용자, 저학력층, 남성, 자녀가 있는 청년에서 알코올 의존과 기능 저하 위험이 더 크게 확인되었다.

흡연에서는 전체의 54.0%가 비흡연자였으나, 흡연자 내부에서는 강한 니코틴 의존 양상이 나타났다. 하루 1갑 내외 또는 그 이상 흡연하는 비율이 적지 않았고, 거리생활자, 남성, 중졸 이하 집단에서 고도 흡연이 두드러졌다. 또한 흡연자의 상당수가 금연구역에서도 흡연을 참기 어렵다고 응답했고,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계속 흡연하는 비율이 55.8%에 달해 자제력 저하와 건강위험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약물 오남용은 전체 경험률이 9.1%로 음주·흡연보다 낮았지만, 경험자 집단의 위험도는 매우 높았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거주자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약물 사용 경험자 다수는 여러 약물을 함께 오용하는 복합 오용 양상을 보였다. 또한 환각, 금단증상, 사용 중단이 어려움, 죄책감, 가족 방임, 불법 행위, 기억상실·경련 등 심각한 신체·심리·사회적 문제가 동반되었다. 특히 거리생활자, 남성, 30대, 고시원·무보증 월세 거주 집단에서 위험이 더 컸다.

〈표 3-3〉 약물 오용 및 부작용 실태

N=187, 17, 단위: %, 명

구분	약물 오용 경험 유무				약물 혼용 여부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혼용함	혼용 안함	전체		
전체	9.1	90.9	187	100.0	76.5	23.5	17	100.0	
거주 유형	거리생활	6.3	93.8	32	100.0	100.0	0.0	2	100.0
	이용시설	18.2	81.8	33	100.0	83.3	16.7	6	100.0
	생활시설	20.0	80.0	10	100.0	0.0	100.0	2	100.0
	고시원·무보증 월세	6.3	93.8	112	100.0	85.7	14.3	7	100.0
성별	남자	9.6	90.4	83	100.0	75.0	25.0	8	100.0
	여자	8.7	91.3	104	100.0	77.8	22.2	9	100.0
연령	10대	0.0	100.0	1	100.0	0.0	0.0	0	100.0
	20대	9.9	90.1	121	100.0	75.0	25.0	12	100.0
	30대	7.7	92.3	65	100.0	80.0	20.0	5	10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9.1	90.9	11	100.0	100.0	0.0	1	100.0
	고졸 이하	9.9	90.1	91	100.0	77.8	22.2	9	100.0
	대학재학 이상	8.2	91.8	85	100.0	71.4	28.6	7	100.0
혼인 상태	기혼	50.0	50.0	2	100.0	100.0	0.0	1	100.0
	미혼	8.9	91.1	180	100.0	75.0	25.0	16	100.0
	동거	0.0	100.0	2	100.0	0.0	0.0	0	100.0
	별거, 이혼	0.0	100.0	3	100.0	0.0	0.0	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0.0	100.0	6	100.0	0.0	0.0	0	100.0
	자녀 없음	9.4	90.6	181	100.0	76.5	23.5	17	100.0

### 3) 정서적 어려움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하는 우울척도(CES-D 11, 단축형)를 통해 지난 1주일간 노숙위기청년들이 경험한 정서적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심각한 심리적 위기 징후를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수면 장애(71.2%)와 무력감(66.9%)이었으며,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과 '엄두가 나지 않음'을 주 3일 이상 경험한다는 응답도 66.3%에 달하여 정서적 고립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의 약 3분의 2가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상당한 우울감(65.3%)과 슬픔(64.7%) 속에서 보내고 있어 심리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3. 주거 환경 실태

#### 1) 아동기 주거환경

노숙위기청년이 현재 겪고 있는 주거 불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생애 초기 주거환경을 조사한 결과, 아동기 주요 거처는 ‘부모님이 사는 집’ 이 가장 많았고, 전세·보증금 있는 월세가 뒤를 이었다. 다만 거리생활 집단은 시설, 위탁가정, 쉼터, 자립지원시설 거주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아, 생애 초기부터 공적 보호체계에 의존한 비율이 높았다. 거주기간은 대체로 5년 이상 장기 거주가 많았지만, 일부는 2년 이내의 단기 거주를 경험했다. 또한 반지하·지하·옥탑 등 비적정 주거 경험도 확인되었고, 협소 주택 거주나 무상 거주 경험은 남성, 저학력층, 이용시설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 거주지의 물리적 질은 전반적으로 ‘양호와 ‘조금 양호’ 응답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불량 또는 ‘조금 불량’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 주거환경의 이질성이 확인되었다.

노숙위기청년들의 아동기 주거환경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일정 부분 확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용 및 시설 미비, 그리고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위생·쾌적성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취약성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이들의 주거불안정이 단순히 성인기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기부터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 2) 청소년기 주거환경

청소년기에도 ‘부모님이 사는 집’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자가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거리생활 집단은 시설·위탁가정·청소년쉼터, 자립지원시설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아 청소년기에도 공적 보호체계에 머문 비중이 높았다. 거주기간은 장기 거주가 많았지만, 일부는 2년 이내 단기 거주를 경험했고,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 경험도 적지 않았다. 점유형태와 주택 규모를 보면 부모 소유 주택이 가장 많았으나, 남성은 월세 비중이 더 높았고, 저학력층은 무상 거주 경험이 두드러졌다. 또한 협소 주택 거주율은 이용시설 이용자와 남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기 거주지의 물리적인 질은 전반적으로 ‘양호’ 및 ‘조금 양호’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일정 수준의 열악한 주거환경 경험이 공존하였다.

청소년기 주거환경은 아동기에 비해 일부 지표에서 개선된 양상을 보이기도 하나,

여전히 공동사용 중심의 생활환경과 주거의 물리적 질적 취약성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노숙위기청년들의 주거불안정이 특정 시기에 발생한 단절적 문제가 아니라,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누적된 구조적 경험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 3) 현재 주거환경 및 물리적 적정성

현재 주거형태는 고시원이 가장 많았고, 보증금 있는 월세, 정부지원 전세임대주택, PC방·찜질방·만화방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거리생활 집단은 PC방·찜질방, 고시원, 일정하지 않은 거처 비중이 높아 주거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했다. 현재 거주 기간은 대부분 1년 이내로 매우 짧았으며, 거리생활과 생활시설 집단에서 단기 거주 비율이 특히 높았다. 보증금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평균 보증금은 406만 원 수준이었으나 고시원·무보증 월세 거주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월세 역시 고시원·무보증 월세 거주자, 남성, 30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비 부담도 일부 집단에서 확인되었다. 직전 거처 역시 고시원, 월세, 정부지원 전세임대, PC방·찜질방 등 불안정한 유형이 많았고, 직전 거주기간도 대체로 1년 이내로 짧아 노숙위기청년의 주거 이동이 잦고 불안정한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의 동거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7.0%가 1인 가구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고시원·무보증 월세 거주자의 경우 92.0%가 1인 거주로 나타나 독거 비율이 매우 높았다.

현재 주거선택 시 고려 요인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요인과 접근성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금 및 월세 수준과 같은 비용 요인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그 다음으로는 위치 및 접근성, 즉 학교·직장·시설과의 거리 등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나타난다. 희망 주거지원 유형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과 같은 정부지원형 안정주거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희망 주거서비스의 경우,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경제적 지원과 생활지원이 결합된 형태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다.

종합하면, 노숙위기청년들은 현재 1인 중심의 불안정한 주거 형태와 낮은 수준의 주거비 구조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주거 선택 역시 비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안정적 주거 확보와 자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 주거지원 모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4〉 현재 주거유형

N=187, 단위: %, 명, 점

구분	현재 주거유형																		
	(정부 자원) 공공/영구/국민 임대 주택	(정부 자원) SH, LH 등 전세 임대 주택	자립 자원 시설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고시원	친구, 동료 집	부모님 사는 집	사설/위탁 가정/청소년/청소녀/청소녀 자원관	달방(모텔·여인숙)	노숙인 종합 자원 센터	PC방, 찜질방, 만화방 등	강변	일정하지 않음	기타	전체		
전체	2.1	9.6	5.9	1.1	14.4	4.3	34.2	1.1	1.1	6.4	0.5	3.2	7.0	0.5	5.9	2.7	187	100.0	
거주유형	거리생활	0.0	6.3	0.0	0.0	3.1	0.0	21.9	6.3	0.0	0.0	0.0	37.5	3.1	21.9	0.0	32	100.0	
	이용시설	6.1	3.0	12.1	0.0	3.0	3.0	6.1	0.0	0.0	24.2	3.0	18.2	0.0	0.0	12.1	33	100.0	
	생활시설	0.0	0.0	30.0	0.0	20.0	0.0	10.0	0.0	0.0	40.0	0.0	0.0	0.0	0.0	0.0	10	100.0	
	고시원·무보증 월세	1.8	13.4	3.6	1.8	20.5	6.3	48.2	0.0	1.8	0.0	0.0	0.0	0.9	0.0	0.9	0.9	112	100.0
성별	남자	0.0	8.4	7.2	1.2	13.3	7.2	38.6	1.2	1.2	1.2	2.4	9.6	1.2	6.0	0.0	83	100.0	
	여자	3.8	10.6	4.8	1.0	15.4	1.9	30.8	1.0	1.0	10.6	0.0	3.8	4.8	0.0	5.8	4.8	104	100.0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1	100.0	
	20대	1.7	10.7	5.8	0.0	11.6	3.3	33.9	1.7	1.7	7.4	0.0	3.3	8.3	0.0	7.4	3.3	121	100.0
	30대	3.1	7.7	6.2	3.1	20.0	6.2	35.4	0.0	0.0	3.1	1.5	3.1	4.6	1.5	3.1	1.5	65	100.0
최종학력	중졸이하	0.0	0.0	0.0	0.0	18.2	9.1	36.4	0.0	0.0	18.2	0.0	0.0	0.0	9.1	9.1	0.0	11	100.0
	고졸이하	1.1	7.7	8.8	0.0	6.6	5.5	35.2	0.0	0.0	8.8	1.1	5.5	11.0	0.0	6.6	2.2	91	100.0
	대재이상	3.5	12.9	3.5	2.4	22.4	2.4	32.9	2.4	2.4	2.4	0.0	1.2	3.5	0.0	4.7	3.5	85	100.0
혼인상태	기혼	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2	100.0	
	미혼	1.7	9.4	6.1	1.1	14.4	4.4	35.0	1.1	1.1	6.1	0.6	3.3	7.2	0.6	5.6	2.2	180	100.0
	동거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	100.0	
자녀유무	별거,이혼	0.0	0.0	0.0	0.0	0.0	0.0	33.3	0.0	0.0	33.3	0.0	0.0	0.0	0.0	33.3	0.0	3	100.0
	자녀있음	0.0	0.0	33.3	16.7	0.0	0.0	0.0	0.0	0.0	16.7	0.0	0.0	0.0	0.0	16.7	16.7	6	100.0
	자녀없음	2.2	9.9	5.0	0.6	14.9	4.4	35.4	1.1	1.1	6.1	0.6	3.3	7.2	0.6	5.5	2.2	181	100.0

## 4. 경제활동 및 자립 기반

### 1) 현재 근로 상태 및 고용 형태

노숙위기청년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정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 특히 이들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연령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원활히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 현황과 수입·지출, 어려움 등 경제 상황 전반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체 응답자 187명의 현재 근로 상태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54.5%가 임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미취업자' 비율도 27.8%에 달하였다. 반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상용직' 비율은 6.4%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극심한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었다.

거주 유형별로는 거리생활 청년의 일용직 비중(71.9%)이 가장 높았으며,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거주자는 미취업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일용직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는데, 중졸 이하 집단은 81.8%가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일용직 비율은 높았으나, 미취업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성별에 따른 고용 위기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 2) 주거위기 이전 근로상태 및 지속 기간

주거 위기를 겪기 이전의 주된 근로 상태는 '임시 일용직'이 4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주거 위기 이전에도 이미 고용 형태가 불안정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생활시설'(10명) 거주자의 경우 '임시 일용직' 비율이 60.0%로 타 유형 대비 두드러지게 높았다. 주거 위기 이전의 주 근로 지속 기간은 평균은 17.39개월로 현재 근로 지속 기간(7.68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시설' 거주자의 평균 지속 기간이 22.30개월로 가장 길었고, '고시원·무보증 월세' 17.91개월, '이용시설' 16.42개월, '거리생활' 14.97개월 순으로 나타나, 주거 불안정성이 극심한 거리생활 청년층이 과거에도 근로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근로 기간이 긴 경향이 뚜렷했는데, 30대의 평균 지속 기간은 22.11개월로 20대(14.95개월)보다 7개월 이상 길었다. 특히 30대에서는 '24개월 초과' 비율이 30.8%에 달해 20대(9.1%)와 큰 차이를 보였다.

### 3) 근로중단 경험 및 구직활동

조사 대상의 79.7%가 ‘근로 중단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해, 노숙위기 청년들이 겪는 고용 불안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거리 생활’ 청년의 근로 중단 경험 비율은 90.6%에 달하는 등 주거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20대(84.3%)가 30대(70.8%)보다 근로 중단 경험이 더 많았다. 근로 중단을 경험한 주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개인의 자발적 퇴사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한 실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고’ (18.8%)와 ‘계약 기간 만료’ (16.8%)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해 단기·임시직 위주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주요 원인임이 드러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거리생활’ 청년의 경우 ‘해고’ (24.1%) 비율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 (13.8%)과 ‘저임금 혹은 체불’ (13.8%)로 인한 근로 중단 비율도 전체 평균을 웃돌아, 주거 위기와 경제적 빈곤이 고용 단절로 직결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 4) 수입 및 지출 현황

전체 응답자의 주요 수입원은 근로소득(62.6%)이었으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매우 열악하였다. 응답자의 84.0%가 월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구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51~100만 원' 구간이 4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출 측면에서는 식비(37.4%)와 주거비(36.4%)가 전체 지출의 약 74%를 차지하여, 소득의 대부분이 의식주 해결 등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투입되고 있었다. 반면 저축이나 교육·훈련, 문화·여가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1% 내외로 매우 미미하여, 미래를 위한 인적 자본 형성이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거주 유형별로 거리생활자는 주거비(59.4%) 부담이, 고시원 거주자는 식비(40.2%)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5) 경제적 어려움 경험

소득 결핍으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실질적인 생활 제약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58.3%가 '끼니를 거름'을 경험하였고, 병원 진료 포기(52.9%), 통신 두절(49.7%), 교통비 절감을 위한 장거리 도보 이동(44.4%) 등 기초적인 생활 환경이 무너진 상태였다. 특히 거리생활 청년은 80% 이상이 끼니 거름과 통신 두절을 경험하

여 절대적 빈곤 상태를 보였다.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사적 이전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으나, 중졸 이하 집단에서는 대부업체 이용 비율이 27.3%로 나타나 다중 채무 및 금융 범죄 노출 위험성도 포착되었다. 20대 청년들이 30대보다 기초 생활 제약을 더 빈번하게 겪고 있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대처하는 비율이 66.7%에 달해 경제적 지지 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표 3-5〉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처 경험

구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처 경험											전체	
	끼니를 거름	병원 진료를 포기하거나 미룸	교통비 절약을 위한 장거리 도보 이동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통신 두절	가족에게 돈을 빌림	친구·지인·동료에게 돈을 빌림	대부업체 이용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소액 대출 이용	물품 판매 또는 전당포 이용	기타	전체		
전체	58.3	52.9	44.4	49.7	8.0	26.7	7.0	11.8	13.4	0.5	187	100.0	
거주 유형	거리생활	81.3	68.8	68.8	84.4	0.0	43.8	15.6	15.6	18.8	3.1	32	100.0
	이용시설	30.3	33.3	36.4	36.4	3.0	21.2	6.1	9.1	18.2	0.0	33	100.0
	생활시설	50.0	20.0	30.0	30.0	10.0	0.0	10.0	0.0	0.0	0.0	10	100.0
	고시원·무보증 월세	60.7	57.1	41.1	45.5	11.6	25.9	4.5	12.5	11.6	0.0	112	100.0
성별	남자	60.2	54.2	49.4	56.6	9.6	30.1	7.2	9.6	13.3	1.2	83	100.0
	여자	56.7	51.9	40.4	44.2	6.7	24.0	6.7	13.5	13.5	0.0	104	100.0
연령	10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	100.0
	20대	63.6	58.7	44.6	56.2	7.4	21.5	7.4	11.6	14.9	0.8	121	100.0
	30대	49.2	43.1	44.6	38.5	9.2	36.9	6.2	12.3	10.8	0.0	65	10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3.6	54.5	45.5	72.7	0.0	45.5	27.3	9.1	18.2	0.0	11	100.0
	고졸 이하	62.6	52.7	45.1	57.1	6.6	25.3	7.7	14.3	13.2	0.0	91	100.0
	대재이상	52.9	52.9	43.5	38.8	10.6	25.9	3.5	9.4	12.9	1.2	85	100.0
혼인 상태	기혼	50.0	50.0	100.0	50.0	50.0	50.0	0.0	0.0	50.0	0.0	2	100.0
	미혼	58.9	52.2	43.9	50.0	7.8	25.6	7.2	12.2	13.3	0.0	180	100.0
	동거	0.0	50.0	0.0	0.0	0.0	100.0	0.0	0.0	0.0	0.0	2	100.0
	벌거, 이혼	66.7	100.0	66.7	66.7	0.0	33.3	0.0	0.0	0.0	33.3	3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7	16.7	50.0	33.3	16.7	66.7	0.0	0.0	16.7	16.7	6	100.0
	자녀 없음	59.7	54.1	44.2	50.3	7.7	25.4	7.2	12.2	13.3	0.0	181	100.0

## 5. 복지서비스 이용 및 정책 욕구

### 1) 복지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실태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인지율은 전체의 56.7%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이용 경험은 38.7%로 더 낮았다. 즉, 시설을 알고 있어도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인지율은 이용시설 거주자와 거리생활 청년, 남성,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생활시설·고시원 거주자, 여성, 30대, 고학력층에서는 낮게 나타나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가 확인되었다.

일시보호시설 이용 경험은 이용시설·생활시설 거주자에서 높았지만, 가장 취약한 거리생활 청년의 이용률은 20.0%로 가장 낮아 실제 위기집단이 지원체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20대와 저학력층은 시설을 알고도 이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 집단별로 정보 접근성과 이용 장벽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향후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노숙위기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은 주거지원(48.1%)과 소득보조(26.7%)로, 직접적 경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였다. 특히 거리생활 집단과 생활시설 거주자는 주거지원 욕구가 매우 높았고, 여성은 주거지원, 남성은 소득보조와 고용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원했다. 자녀가 있는 집단은 주거·소득 외에도 채무 상담과 돌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도 안정적 주거 확보와 생활비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으며, 구직 서비스보다 채무 관리와 심리·정서 지원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숙위기청년이 단순히 일자리 제공보다, 주거 불안정과 부채, 심리적 위기 같은 자립의 선결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은 고용 중심 접근보다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기반으로, 채무 및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는 단계적 자립 지원 체계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 제4장

# 노숙위기청년 사례 분석

제1절 노숙위기청년 사례 심층 분석

제2절 청년주거지원사업 종사자 사례 분석



## 제1절 | 노숙위기청년 사례 심층 분석

본 연구는 주거위기 상황을 경험한 청년들의 생활 경험과 지원서비스 이용 과정, 그리고 자립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노숙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7명의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청년주거지원센터 <청년, 공간> 등에서 대면 방식의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형태로 실시되었다. 인터뷰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20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 관계, (2) 현재 주거 상황 및 주거 이동 경험, (3) 노숙 및 주거 상실 경험, (4) 공공 및 민간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5) 향후 자립 계획, (6)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의견이다.

참여자들은 고시원, 원룸, 노숙인 시설, 찜질방, PC방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직, 가족 갈등, 건강 문제, 부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거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기적인 주거비 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일정한 도움을 제공하였으나, 지속적인 주거 안정, 채무 문제 해결, 안정적 일자리 연계, 정신건강 지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수요가 확인되었다.

자료분석은 Braun & Clarke(2006)의 주제분석 절차에 따라 전사본 반복 검토, 개방 코딩, 사례 내·사례 간 비교, 주제 도출, 경험 흐름 재구성의 순서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위기 청년의 경험 구조와 향후 주거 계획, 지원의 실효성을 서사적으로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주거정책과 아동·가족복지 분야의 실무·연구 경험이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비지시적 면담과 성찰메모를 통해 선이해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3인 연구자의 코딩 일치도 확인, 동료검토, 상세한 사례 기술, 감사추적 기록, 분석 과정 문서화를 통해 신뢰성, 전이성, 의존성, 확인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서면 동의를 제출하였고,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수행되었다.

〈표 4-1〉 연구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출생연도 (성별)	주거 형태	지원 유형		지원 기간 (26.01기준)
A	1999 (남)	고시원	긴급지원	고시원 연계 및 자활사업, 주거비지원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3개월
B	2002 (여)	고시원 → LH전세 임대 예정	긴급지원	고시원 주거비,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주거상향 지원사업(LH 전세임대),	이주 준비 단계/ 5개월
C	1995 (남)	원룸	통합지원	주거지원 및 생활지원, 취업지원, 의료비, 공공지원(수급신청 등) 연계,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15개월
D	1992 (남)	고시원	긴급지원	고시원 주거비, 취업기술교육 연계, 공공일자리 연계, 커뮤니티프로그램,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6개월
E	1996 (남)	원룸	통합지원	주거상향 지원(고시원→원룸), 주거비지원, 취업지원, 심리상담, 커뮤니티프로그램,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4개월
F	1999 (남)	원룸	통합지원	주거비 지원, 취업 연계 및 자립 지원,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12개월
G	1997 (남)	원룸	통합지원	주거비 지원 및 자활·취업 연계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12개월
H	1996 (여)	썬터 → 고시원	긴급지원	고시원 주거비,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3개월
I	1996 (여)	고시원	긴급지원	고시원 주거비,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1개월
J	2001 (여)	고시원 → 원룸	통합지원	고시원 주거비, 주거상향지원,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취업연계, 커뮤니티프로그램	4개월
K	2003 (여)	원룸	통합지원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주거비지원, 법률상담, 커뮤니티프로그램	11개월
L	1999 (남)	고시원	긴급지원	고시원 주거비,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일자리 연계, 커뮤니티프로그램	3개월
M	1995 (남)	노숙인시설 →고시원예정	긴급지원	주거지원 사업 연계(입주 준비 단계), 일자리 연계	지원 예정
N	2003 (남)	고시원 → 원룸	통합지원	주거상향 지원(보증금·월세 지원), 의료비 지원, 생활키트 및 계절용품 지원, 법률 상담, 온라인 교육 지원	6개월
O	1999 (남)	고시원	긴급지원	주거비지원, 교통비·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1개월
P	1995 (남)	고시원	긴급지원	고시원 주거비,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커뮤니티프로그램, 재무상담 자원 연계	3개월
Q	1999 (여)	LH 임대주택	통합지원	주거비 지원, 심리상담, 부동산 계약과정 동행지원, 주거상향지원(원룸→LH전세임대),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12개월

### 3. 노숙위기청년 심층 인터뷰 결과

본 심층인터뷰는 아름다운재단의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한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한 구체적인 경험 사례를 분석하고자 현 주거 상태, 노숙경험, 지원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지원 서비스의 실효성, 자립 및 미래 계획 총 5개의 핵심 주제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5개의 핵심주제와 13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는 (1) 조기 독립과 가족과의 느슨한 연결, (2) 고비용 고시원과 제한된 공간 자율성, (3) 최소한의 독립 공간 확보에 대한 안도, (4) 조건부 복지와 청년 주거의 불완전한 안정성, (5) 주거 전환점이 된 지원으로 구분된다. 각 주제는 조기 독립에서 시작된 주거 불안이 노숙으로 이어지고, 이후 지원 경험과 자립 과정에서의 제약을 거쳐 정책 개선 요구로 확장되는 일련의 구조적 흐름 속에서 청년 주거위기의 전개 과정을 드러내도록 구성되었다. <표 2>에 각 핵심주제와 범주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 주거위기 경험의 공통 패턴과 사례별 특수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 핵심주제와 상위범주

핵심주제(Themes)	범주(Categories)
조기 독립과 가족과의 느슨한 연결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단독 생계 ..... 가족과의 거리 유지 혹은 단절 ..... 가족 단절이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확장
고비용 고시원과 제한된 공간 자율성	높은 월세 부담 ..... 단기 계약 구조와 재이동 가능성
최소한의 독립 공간 확보에 대한 안도	외부 위험으로부터의 물리적 보호와 경계의 회복 ..... 사적 영역의 회복과 존엄성의 재구성
조건부 복지와 청년 주거의 불완전한 안정성	정보 접근의 장벽과 신청 구조의 복잡성 ..... 구조적 한계의 지속에 대한 우려
주거 전환점이 된 지원	월세 지원을 통한 주거유지의 안전망 확보 ..... 생필품·긴급지원을 통한 생존 유지의 일차적 안전망 ..... 고립에서 연결로, 사회적 관계의 회복 ..... 자립 가능성의 재구성

## 1) 핵심주제 1: 조기 독립과 가족과의 느슨한 연결

청년들은 대체로 20대 초반 또는 그 이전부터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는 자발적 독립이라기보다 가족 갈등, 가정 해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가족은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호체계로 작동하지 못했고, 이러한 가족 단절은 친구·지인 관계의 약화로도 이어져 청년들을 더욱 고립시켰다. 결국 청년들은 주거와 생계 문제를 개인 단위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 (1) 범주 1: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단독 생계

“20살 때부터 바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5년 정도 됐어요.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드렸어요. 집을 구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거라 말을 못하고 그냥 혼자 버텼어요. 어떻게든 제 힘으로 살고 싶으니까..” (청년 B)

“18살부터 집을 나와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갈 데가 없어서 길에서 자거나 친구 집에 얹혀 지냈어요. 이후에 공장 숙소, 고시원, 여관방, 원룸 이런 데를 계속 옮겨 다녔어요.” (청년 M)

### (2) 범주 2: 가족과의 거리 유지 혹은 단절

“가족들하고도 연락이 끊겼으니까 사실상 혼자죠.” (청년 A)

“어머니하고 연락은 하고 다시 사이가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그 집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청년 C)

### (3) 범주 3: 가족 단절이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확장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다 끊겼고 지인들하고도 다 끊겼으니까 사실상 혼자죠.” (청년 A)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얻어먹을 수도 없는거고, 그러면서 사실 조금씩 인간관계도 멀어지고 점차 고립되어 갔던 것 같아요. 고립이 되면서 이제 계속 안좋은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죠.” (청년 M)

“쉽터를 처음 들어간 것도. 이제 관계가 아예 동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 있을 데가 없는거예요. 글서 검색을 하다가 쉽터 같은게 떴어요.” (청년 P)

## 2) 핵심주제 2: 고비용 고시원과 제한된 공간 자율성

고시원은 보증금 부담이 적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시 거처였지만, 높은 월세와 협소한 공간, 규칙과 통제로 인해 안정적 주거 대안이 되기 어려웠다. 청년들은 이를 ‘버티는 공간’으로 인식하였고, 생활 자율성 또한 심각하게 제한받았다.

### (1) 범주 1: 높은 월세 부담

“연남동 고시원 월세가 80만원인데, 지금 한 달 정도 밀린 상태예요.” (청년 B)

“10평 정도 집을 기대했는데, 이만한 집을 구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더라고요. 저는 월세가 10만원이거든요. 이만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많이 헤매서 너무 힘들었어요.” (청년 Q)

“제가 규칙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고시원에 있을 때도 다음 달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청년 P)

### (2) 범주 2: 공간 자율성의 제약

“마트에서 반찬 같은거 좀 사와서 요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게 오래 걸리면 뒷사람들이 기다리니까...” (청년 A)

“바깥 창문에 없다 보니까 답답하고, 좁잖아요. 제가 덩치가 큰데 침대가 벽에 있다 보니까 누으면 좁아요. 자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잠이 불편하죠. 그리고 주변 소음 차단이 안되니까 어렵더라고요.” (청년 D)

“단체 생활이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 어르신들이 꼬장 부리는 것도 많았고...” (청년 C)

### 3) 핵심주제 3: 최소한의 독립공간 확보에 대한 안도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는 단순한 거처 마련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의 출발점이었다. 고시원, 원룸, 쉼터 등 임시적 형태라 하더라도 개인 공간이 생기면 거리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삶을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감각이 형성되었다.

#### (1) 범주 1: 외부 위험으로부터의 물리적 보호와 경계의 회복

“저는 솔직히 고시원이랑 5평자리 원룸이랑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차이 나더라고요. 안전함도 있고.” (청년 Q)

“밥도 진짜 맛있고, 시설도 되게 넓고 관리도 되게 신경 많이 써서 하시고.” (청년 M)

#### (2) 범주 2: 사적 영역의 회복과 존엄성의 재구성

“지금도 다른 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 다 어리다고 얘기하시는 편인데, 찜질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막 혼자 자고 생활하는게 눈에 보이면 집을 나왔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서.. 시선이 의식이 좀 되었어요.. 그런데 보호자가 있는 기관에서 보호를 받으면 신체적인 보호를 포함해서 밥도 주고 일단 따뜻하게 잘 곳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있고 대화 걸어주는 사람도 있고” (청년 K)

“그래도 혼자 막 우울하게 계속 술 먹고 하는 것보다는 단체 생활이 그래도 사람들과 사소한 대화라도 되잖아요. 그런 말이라도 주고 받으면서 조금은 (우울감) 덜 하지 않았나 싶어요.” (청년 M)

“안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일단 집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 때문에 좀 차근차근 내 앞의 어려운 것들을 안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거 지원이 제일 좋아요.” (청년 C)

#### 4) 핵심주제 4: 조건부 복지와 청년 주거의 불안정한 안정성

주거지원과 복지서비스는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지만, 지원 기간과 조건, 퇴소 이후의 불확실성 때문에 청년들이 체감하는 안정성은 제한적이었다. 제도는 위기를 완화했지만 장기적 안착까지 보장하지는 못했다.

##### (1) 범주 1: 정보 접근성의 장벽과 신청 구조의 복잡성

“가끔 알림이 오긴 하는데, 너무 거대해보여가지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지? 느낌이에요. 섬이 큰데 출입구를 못찾는 기분이라, 이거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청년 주택이라면 청약부터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전화만 하면 되는건지. 이런 것조차 아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대상 요건 뭐 이런거 밖에 안 나오니까 좀 어렵죠. 주거지원 센터의 청년 맞춤형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같은)” (청년 C)

“이게 찾으려면 찾아가는 거지만, 어찌됐든 지금 20-30대 사람들은 휴대폰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틱톡이나 유튜브와 같은 커뮤니티를 사람들은 할거고, 그렇게 되면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연찮게라도 보고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 P)

“오픈 채팅방에 약간 노숙 쉼터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쉼터라는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일용직 같은 거를 해서 돈 벌어서 텐트를 사서 생활하면서 돈을 좀 모아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청년 F)

##### (2) 범주 2: 구조적 한계의 지속에 대한 우려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지나면,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줘야 되잖아요. 주휴수당도 챙겨줘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딱 11개월하고 한 달 쉬었다가.. 연속으로는 안되니까.” (청년 M)

“사우나도 가끔 보내주고 옷도 주고, 밥도 맛있고 예방접종도 해줘요. 그런데 이런 지원이 계속 되는건 아니니까 나중에가 좀 걱정되지요.” (청년 Q)

## 5) 핵심주제 5: 주거 전환점이 된 지원

지원체계와의 연결은 청년들에게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주거 유지, 생존 보장, 사회적 관계 회복, 자립 가능성 재구성의 전환점이 되었다. 지원은 “당장 버티게 하는 힘” 이자 “앞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반” 으로 작동하였다.

### (1) 범주 1: 월세 지원을 통한 주거유지의 안전망 확보

“이전에는 금방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길거리에서 뭐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겨울이 다가와서요. 처음에는 보현종합지원센터에서 지낼 수 있다고 하니깐 무엇보다 이제 안도감이 들었죠. 나도 이제 건물 안에서 당당하게 누워 잘 수도 있고 따뜻한 밥도 먹을 수가 있구나...” (청년 A)

“월세, 통신비, 교통비 등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당장 몇 개월을 생각하면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청년 P)

“생활비나 월세 같은거를 지원해주셔서 좋았어요. 고시원비를 긴급지원으로 서너달 받고 나서 통합 지원이 되어서 원룸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고시원보다 원룸이 더 편하고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어서 훨씬 편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 N)

### (2) 범주 2: 생필품·긴급지원을 통한 생존 유지의 일차적 안전망

“키트같은 거 챙겨주시고, 뭐 필요한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하셨어요. 생리대라든지 휴지, 샴푸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청년 H)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서비스를 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고, 사실 오히려 취업보다 그게 조금 더 우선순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청년 H)

“여름키트, 겨울키트 등 받은 물품 중에 겨울 패딩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청년 N)

“교육비는 인강 끊어주셔서.. 제가 경찰직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청년 N)

“집 구할 때 같이 봐주셔서 (계약 등) 좀 괜찮은 집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고, 혼자보다는 든든했습니다.” (청년 N)

“신분증도 해주시고 전입신고도 같이 가서 해주시고, 지금 다 만들어주신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딱 기본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신 건데 그게 너무 어려웠던거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기본으로 가는게..” (청년 L)

“집 계약할 때 이 사업(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에서 고시원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줬어요. 제가 중간에서 해야될 거는 없었어요. 진짜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원래는 다음날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점수 5점 만점이면 저는 5점이에요. 진짜 빨리 처리해주셨어요” (청년 O)

### (3) 범주 3: 고립에서 연결로, 사회적 관계의 회복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진짜로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또 방황을 했을텐데, 어쨌든 주어진 시간 동안 지원을 해주시니까 좀 안정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고시원이라도 발 뺀고 편히 잘 수 있으니까, 되게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P)

“자기 일처럼 해주시는 게 좋았어요. 이 집이 싸고 이 집 중에 고르세요 보다는 이 집은 가격은 싼데 너무 불편할 것 같다 등등. 진짜 친구같이 이야기 해주시는...체크리스트도 알려주시고.” (청년 C)

“저는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복지 서비스, 현재 구축된 이런 시스템만 해도 뭐 되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서는 고마운 거고, 여기서 뭔가 더 바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 M)

“지금은 아름다운재단에서 하는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밖에 없으니까, 주시면 무엇이든 감사합니다.” (청년 K)

“심리상담지원이요. 굉장히 저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파악을 잘 해주시고 조

언을 잘해주세요. 굉장히 도움 많이 되었어요.” (청년 Q)

#### (4) 범주 4: 자립 가능성의 재구성

“일단은 반일제 근무를 통해서 유지하고 싶어요. 한 70-80만원을 벌어요. 그런데 반일제가 안될 경우 제가 돈을 벌 수단이 또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한게 휴대폰 지원을 다시 받고 물류 센터에 단기간으로 나가는 걸 도전해 보려고요.” (청년 A)

“사실 여기서 지원을 받는 것만으로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 80% 정도는 해결을 해주시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립이나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청년 O)

#### 부가 주제: 본인의 지난 경험들이 '노숙'경험이라고 생각하는지?

본 인터뷰의 주요 핵심주제와 범주 외에도, 인터뷰 과정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노숙'으로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나타났다. 청년들은 자신의 경험을 '노숙'으로 인식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공원, 지하철역, 길거리와 같은 야외 생활만을 '노숙'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고, 쉼터·찜질방·PC방·모텔 등 임시 숙박 경험은 노숙과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객관적으로는 주거불안정이나 준노숙 상태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청년 스스로는 이를 노숙으로 명확히 인식하지 않는 경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길거리 생활(공원 벤치, 지하철 등)의 노숙이 노숙이라고 생각해요.”

“노숙 하면 서울역밖에 생각이 안나요.”

“내가 한 경험은 노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보호 받고 있기 때문에.”

## 제2절 |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종사자 사례 분석

### 1.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종사자 FGI 개요

본 연구에서는 노숙위기청년들에 대한 지원 현장의 실천 경험과 정책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FGI는 청년 주거위기 대응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에서 경험한 청년 주거위기의 특성과 지원 과정에서의 어려움, 기존 정책 및 지원체계의 한계, 향후 정책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FGI는 2026년 2월 27일 청년주거지원센터 <청년, 공간>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FGI에서는 청년 주거위기 발생 배경, 청년 노숙의 특성,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 청년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종사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FGI에는 청년주거지원 및 노숙인 지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6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청년주거지원센터 <청년, 공간>, 노숙인 지원기관, 여성 지원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 주거위기 대응 및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의 직무는 <청년, 공간> 운영, 긴급주거지원, 임시주거 지원, 사례관리, 주거·일자리 연계 등 청년 주거위기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종사자들의 주요 직무를 살펴보면 청년주거지원센터 <청년, 공간> 운영 및 긴급주거지원 업무 담당,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및 사업대상자 선정, 전세임대주택 및 LH 연계, 임시주거 지원, 일자리 및 주거 연계 업무,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청년 대상 지원업무 수행 등으로 포괄적이었다. 이처럼 청년 주거위기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FGI를 실시함으로써 청년 주거위기 지원 현장의 실제 상황과 정책적 과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종사자 FGI 결과

〈표 4-3〉 핵심주제와 상위범주

핵심주제(Themes)	범주(Categories)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은폐된 청년 노숙'	비가시적 공간과 주거위기 상태로 나타나는 은폐된 청년 노숙 통계와 현장 인식 간의 괴리
청년 노숙 발생의 구조적·개인적 복합 원인	빈곤의 대물림과 가족 지원망의 부재 정신질환 및 중독 문제 불안정 노동과 사회 진입 실패 전세사기·취업사기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노숙인 정체성에 대한 강한 낙인과 거부	노숙인 낙인에 대한 거부와 정체성 부정 노숙인 시설 이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
기존 노숙인 지원체계의 청년 비적합성	중장년 중심 프로그램 시설 중심 지원체계와 생활환경의 청년 비적합성
불안정 노동과 자립 유지의 어려움	단기·불안정 노동 중심의 생계 유지 자립 유지의 어려움과 시설 의존적 생활 패턴
청년 자립을 위한 핵심 조건: 주거-일자리-관계망의 통합 지원	안정적 주거 기반의 중요성 단계적 일자리 지원 체계 필요 사회적 관계망과 정서적 지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주거위기	청년과 노숙정책 사이의 공백 청년 특화 주거지원 및 서비스 체계의 부족 정책 정보 접근성과 통합 지원체계의 필요

## 1. 핵심주제 1: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은폐된 청년 노숙’

종사자들은 청년 노숙이 전통적인 거리 노숙보다 PC방, 코인세탁방, 무인카페, 고시원 퇴거 직전 상태 등 일상 공간 속 비가시적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청년들은 자신의 상황을 ‘노숙’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낙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공식 통계보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규모가 더 크게 인식되고 있었다.

### 1) 하위범주 1: 비가시적 공간과 주거위기 상태로 나타나는 은폐된 청년 노숙

“길에서 자는 건 아닌데 PC방에서 계속 잔다든지 밤을 PC방에서 보내고 낮에는 그냥 거리를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코인세탁방이나 무인 카페 같은 곳들을 전전하는 느낌의 노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종사자 B)

“저희가 지원했던 청년들 중에는 정말 길거리 노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노숙 직전 단계에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어요. 한 달 뒤에 퇴거해야 한다든지, 일주일 뒤에 방을 비워줘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종사자 B)

“노숙인 지원이나 쉼터 이렇게 아니라 주거 지원, 월세 지원 이런 형태로 검색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입이 훨씬 많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 노숙이라고 까지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사자 B)

“청년들에게 왜 노숙인 센터나 시설로 가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노숙인 센터나 시설의 이미지가 청년들에게는 너무 강렬했다는 거죠.” (종사자 A)

### 2) 하위범주 2: 통계와 현장 인식 간의 괴리

“전체 노숙인 범주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들은 높지 않고, 증가한다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0대가 한 5%, 30대가 6%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청년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종사자 C)

“저희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신청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적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사자 B)

## 2. 핵심주제 2: 청년 노숙 발생의 구조적·개인적 복합 원인

종사자들은 청년 노숙이 개인의 일시적 실패가 아니라 가족 배경, 정신건강 문제, 불안정 노동, 사기 피해 등 구조적·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 1) 하위범주 1: 빈곤의 대물림과 가족 지원망의 부재

“첫 번째는 가난의 대물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빈곤한 생활을 하면서 성인이 됐는데도 독립해서도 어떤 지원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고 다시 시설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종사자 F)

### 2) 하위범주 2: 정신질환 및 중독 문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재발하면서 주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사자 F)

“10명 중에 3-4명 정도는 도박성이 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물에 끼어들어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7-8년 정도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주거와 일자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드렸지만, 그 안에서 본인이 결국 빚을 만들고 좋지 않은 환경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고 하다보니...” (종사자 D)

### 3) 하위범주 3: 불안정 노동과 사회 진입 실패

“플랫폼 노동이나 단기 일용직 같은 불안정한 노동 상태에 있다가 월세를 못 내고 결국 주거를 이탈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 습니다.” (종사자 F)

“근로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양해를 하겠다고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데도, 노숙인 시설에 있던 친구들은 그 일도 어려워 하더라고요.” (종사자 A)

### 4) 하위범주 4: 전세사기·취업사기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청년들을 만나면서 취업 사기나 해외 취업 사기, 전세 사기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먼저 알게 됐 습니다.” (종사자 A)

### 3. 핵심주제 3: 노숙인 정체성에 대한 강한 낙인과 거부

#### 1) 하위범주 1: 노숙인 낙인에 대한 거부와 정체성 부정

“청년들은 ‘내가 여기 오는 건 내 인생이 망했다는 뜻’ 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종사자 D)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나는 노숙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사자 C)

#### 2) 하위범주 2: 노숙인 시설 이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

“노숙인 센터나 시설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청년들은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사자 A)

### 4. 핵심주제 4: 기존 노숙인 지원체계의 청년 비적합성

#### 1) 하위범주 1: 중장년 중심 프로그램

“프로그램 자체가 대부분 중장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참여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종사자 C)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아침 아니면 낮에 해요. 청년들은 낮에 일을 해야 하니까 아침이나 낮에 하는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종사자 D)

#### 2) 하위범주 2: 시설 중심 지원체계와 생활환경의 청년 비적합성

“청년들이 주거 문제가 있을 때 노숙인 시설로 오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현장에서도 계속 있습니다.” (종사자 B)

“시설에 가면 대부분 연령대가 50대 이상이라서 청년들이 오래 머무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종사자 C)

## 5. 핵심주제 5: 불안정 노동과 자립 유지의 어려움

### 1) 하위범주 1: 단기·불안정 노동 중심의 생계 유지

“쿠광이나 배달 아르바이트 같은 걸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방식으로 버티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종사자 A)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연명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 걸 현장에서는 체감하고 있어요.” (종사자 A)

### 2) 하위범주 2: 자립 유지의 어려움과 시설 의존적 생활 패턴

“주거 지원을 해도 청년들이 계속 자립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 14명 중에 3명 정도밖에 안되었고요. 나중에 상담할 때 보면 일을 결국 못해서 다시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종사자 E)

“굳이 내가 내 집을 구하고 공과금 내고 힘들게 일을 해야되나? 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사자 D)

## 6. 핵심주제 6: 청년 자립을 위한 핵심 조건:

### 주거-일자리-관계망의 통합 지원

종사자들은 청년 자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지원이나 일자리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안정적 주거, 단계적 일자리, 관계망과 정서적 지지가 함께 제공되는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 하위범주 1: 안정적 주거 기반의 중요성

“개별화된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과연 시설에 있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밥을 무료로 제공하고 공간을 무료로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혼자서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독립적인 탈시설에서 혼자 살고 싶어 하지.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에 따르는 개인적인 공간이나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종사자 F)

## 2) 하위범주 2: 단계적 일자리 지원 체계 필요

“단계별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는 정말 쉬운 수준의 자활 또는 40시간 이상 일해야하는 직장의 선택지이고, 그 중간 어느 곳이 없으니까요. 이 친구들에게는 사실 한 달을 일해서 내가 다음달 월급을 받는 것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종사자 B)

“청년들에게는 주거만 제공해주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로 정책들이 전혀 없거든요. 청년들이 공공근로를 신청하려고 해도 어린 나이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간 일자리를 하려해도 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인거죠. 결국 일용직, 배달직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청년들에게 주거도 중요한데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사자 D)

## 3) 하위범주 3: 사회적 관계망과 정서적 지지

“젊은 분들이 오셨을 때, 중장년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얻어가고, 일자리 연계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종사자 E)

# 7. 핵심주제 7: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주거위기

청년 주거위기 문제는 청년정책과 노숙정책 사이의 공백 속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 특화 주거지원과 통합적 정보 전달체계의 부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 1) 하위범주 1: 청년과 노숙정책 사이의 공백

“청년 노숙은 청년 정책과 노숙 정책 사이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사자 D)

## 2) 하위범주 2: 청년 특화 주거지원 및 서비스 체계의 부족

“청년을 위한 지원주택이 마련되어야 해요. 단계별로 개별의 특성에 맞춰서 임시주거지원이 라든지. ... 중략 ... 이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사자 F)

“여자인 친구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한국에 여성 노숙인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여성 노숙인 시설을 가려고 하면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야 되며 등등 조건이 몇 가지 더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종사자 A)

### 3) 하위범주 3: 정책 정보 접근성과 통합 지원체계의 필요

“지원제도를 알고도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사자 A)

“인터넷 찾아보고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은 쿠팡이나 일용직 하신 분들이 서로 정보를 통해서 오신 경우도 많아요.” (종사자 D)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와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앞두고 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오신 분들, 거리에서 발견되어서 경찰에 의해 의뢰되는 경우들. 저희는 미국에서도 온 적이 있었어요.” (종사자 F)

“검색해서 내방하시는 분들, 노숙인 위기 대응 콜센터로 전화를 주면 저희가 유관기관 연계나 정보 제공 등을 드리는 부분, 주민센터나 지하철에 부착된 포스터 보고 방문하시는 분들, 경찰이나 주민센터 통해서 어려워서 연락을 해보고 하룻밤 잘 곳을 위해 연계된 케이스 등 다양합니다.” (종사자 C)

“저희가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복지 서비스들이 워터치 방식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웹의 시대에서 앱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내가 찾아보는 것보다 나에게 쏘주는 정보들이 지금은 더 많이 익숙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라고요.” (종사자 A)

## 3. 소결

종합하면, 청년 노숙과 주거위기는 단순한 거리 노숙이 아니라 PC방, 무인공간, 고시원 퇴거 직전 상태 등 비가시적이고 은폐된 형태로 나타나며, 공식 통계에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그 배경에는 빈곤의 대물림, 가족 지원망의 부재, 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 불안정 노동, 전세·취업사기 등 다양한 구조적·개인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청년들은 ‘노숙인’이라는 낙인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노숙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지원체계 접근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 노숙인 지원체계 역시 중장년 중심의 프로그램과 시설 환경에 기반하고 있어 청년의 생활양식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불안정 노동과 낮은 자립 유지 가능성은 시설 의존과 반복적 이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청년 주거위기 대응은 임시 주거 지원을 넘어 주거, 일자리, 관계망, 정보, 사례관리가 결합된 청년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제5장

# 통합적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제안

제1절 청년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2절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3절 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 확장과 사업 발전 방향



## 제1절 | 청년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 1. 노숙위기청년 정책 대상화와 조기개입 체계 마련

#### 1) 청소년기 거리 생활과 청년 노숙의 부적절한 연계성

실태조사 결과, 청년 노숙인의 상당수가 아동기 시설 거주나 청소년 쉼터 생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증대되었으나, 쉼터 등 생활시설 외 거처에서 지내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이들 간의 서비스 격차가 매우 크다. 이는 보건복지부(보호종료아동)와 여성가족부(청소년 쉼터), 국토교통부(주거정책)로 분절된 전달체계에 기인한다. 특히 쉼터 퇴소 청년이 다시 노숙 위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연속적 사례관리 체계가 전무하여, 국가가 자립의 결정적 시기에 이들을 정책적 사각지대에 방치함으로써 노숙의 고착화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2) 청년 주거정책의 높은 진입 장벽과 역설적 사각지대의 발생

청년은 현재 주거정책의 핵심적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요 정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 꾸준한 근로 이력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거가 가장 절실한 노숙위기 청년들은 오히려 제도 진입조차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보증금 마련이 불가능하거나 신용 및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대출은 도달하기 힘든 높은 장벽이다. 결과적으로 주거 환경이 가장 열악한 위기 청년들이 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소외되는 역설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의 청년 주거정책은 가장 취약한 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에 그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 3) 노숙위기청년을 별도의 정책 대상군으로 명시할 필요성

본 연구 결과는 노숙위기청년의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결핍을 넘어 가족 단절, 부채, 정신건강, 관계망 약화 등이 얽힌 복합적 위기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행 청년 주거지원정책과 노숙인 지원체계는 이러한 복합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청년 주거정책은 일정한 소득과 행정적 요건을 전제로 설계되어, 세대 분리나 증빙이 어려운 가장 취약한 청년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역설을 초래하였다. 이는 정책이 존재해도 실질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접근 불가능한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며, 청년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동시에 중장년 중심의 노숙인 지원체계 또한 청년들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4) 노숙 이전 단계의 위험을 포착하는 예방적 접근으로의 전환

본 연구에서는 노숙위기청년을 별도의 정책 대상군으로 명시하는 제도적 재구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간 청년은 일반 청년정책으로, 노숙인은 전통적 노숙인 복지정책으로 이분화되어 그 경계에 놓인 ‘노숙위기청년’을 효과적으로 포착하지 못하였다. 실태조사와 질적연구 결과, 고시원·PC방·지인 집 전전 등 불안정한 주거 상태가 청년층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공식적 ‘노숙’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주거 상실 위험이 매우 높거나 이미 임시 주거를 전전하는 상황임을 의미하며, 이 시기에 조기 개입이 부재할 경우 거리 노숙이나 장기 시설 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책 정의 시 거리 노숙 여부만을 따지기보다 비적정 주거, 관계망 단절, 퇴거 위험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즉, 노숙위기 상황을 주거불안과 노숙을 잇는 연속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후 대응이 아닌 노숙 이행 전 단계에서 개입하는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2. 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준 완화와 주거유지 지원 확대

### 1) 독립가구 인정과 소득·자산 기준의 유연한 적용

노숙위기청년에 대해 독립가구 인정과 소득·자산 기준 적용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원가족과의 갈등이나 폭력, 방임, 경제적 착취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가족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함에도 서류상으로는 부모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복지와 주거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선별 방식은 가족관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청년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며, 이는 주거위기청년에게 ‘가족이

있으나 도움받을 수 없는 상태'를 제도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향후에는 청년 가구 분리 인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관계 단절이나 가정폭력, 경제적 착취, 시설 퇴소 등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모 소득 반영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숙위기청년의 경우 초기에 소득·자산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기보다, 우선 주거안정을 확보한 이후 사례관리를 통해 자격을 정비하는 방식의 단계적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삶의 조건을 기준으로 제도 설계를 재구성하는 방향이다.

## 2) 단순 주거비 지원을 넘어선 주거유지 지원의 필요성

주거지원의 내용은 단순한 비용 보조를 넘어 '주거유지 지원'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 주거 지원과 소득 보조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질적연구에서도 단기 주거비 지원은 위기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장기적인 주거 유지를 위해서는 채무 조정, 안정적 일자리, 정신건강 및 법률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주거를 유지하고 생활을 재조직할 수 있는 조건 전체이다. 따라서 주거지원은 보증금·월세를 포함하여 이사비, 가전·가구, 공과금 체납 정리, 주거 상담 및 적응 지원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대출형 금융지원 접근이 어려운 비정형 거주 거주 청년에게는 현금성 주거유지 지원과 사례관리의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3) 청년 주거정책과 노숙인 지원체계를 잇는 중간단계 서비스 구축

사후 대응 중심의 노숙인 지원체계와 사전 예방이 취약한 청년 주거정책 사이의 공백을 메울 '중간단계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노숙인 지원체계는 시설 진입 이후의 사후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어 노숙 직전의 위기 청년들을 포괄하지 못하며, 일반 청년 주거정책은 복잡한 서류와 신청 능력을 전제로 하여 위기 청년에게는 문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이를 연결하는 '주거위기청년 전담 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 퇴거 위험, 시설 퇴소 전후, 주거 상실 직후 등 결정적 전환 국면에서 신속히 개입하는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긴급 주거와 집중 사례관리를 결합한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노숙이 발생하기 전, 위험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개입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

## 제2절 | 자립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 1. 주거를 중심축으로 한 통합지원 모델의 정착

#### 1) 노숙위기청년 지원에서 지역 단위 협력체계의 필요성

노숙위기청년의 자립은 어느 한 기관이나 개별 정책만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본 연구의 질적분석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년들은 주거 상실 이전부터 가족 갈등, 보호망 붕괴, 실직, 불안정 노동, 지역 이동, 관계 단절, 건강 악화 등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일부 청년은 친구 집에 머물거나 지역을 옮겨 다니며 일용직 노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계까지 약화되었고, 쉼터의 규율과 이동성은 다시 관계 유지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이는 자립 안전망이 단순히 서비스 제공 기관의 목록이 아니라, 청년이 실제로 연결되고 머무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계망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 2) 주거위기청년 지원에서 '주거 우선' 접근의 의미

주거를 중심축으로 하되 분야별 서비스가 뒤따르는 '주거 기반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은 이러한 방향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노숙 상태 또는 노숙 위험에 놓인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긴급 주거지원과 사례관리를 결합하여 노숙 상태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지원과 구별된다. 즉 이 사업은 청년이 자격을 완전히 갖춘 이후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기 상태에서 우선 머물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 주고 이후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업은 비록 고시원 등 임시적 형태를 포함하더라도, '주거를 먼저 제공하고 이후 회복과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거 우선, 혹은 하우징 퍼스트적 문제의식을 한국의 청년 주거위기 현실에 맞게 적용한 실천적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3) 긴급주거 제공과 사례관리의 결합이 갖는 효과

사례분석에서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관리비 지원과 더불어 식료품, 생활물품, 의료비, 교육비, LH 전세임대 연계, 법률지원, 상담 등을 결합하여 청년의 주거상향과 일상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지원이 단독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주거를 거점으로 다른 지원이 연계될 때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참여자들의 변화는 ‘불안정·비주거 상태→임시주거→긴급주거지원 개입→사례관리 및 주거지원→안정적 민간주거→공공주거 진입→주거 안정 및 자립’ 이라는 경로 속에서 설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주거 위기청년에게 주거가 단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관계 회복과 건강 회복, 취업 준비, 제도 접근, 일상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자립은 취업이나 소득 발생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 사업의 효과성은 바로 이 지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 4) 사각지대를 메운 민간사업으로서의 실천적 의의

무엇보다 이 사업의 중요한 의의는 기존 공공정책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대상에게 실제로 접근했다는 데 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공공의 청년 주거정책은 일정한 소득, 독립가구 요건, 신청 및 대기 절차 이행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가장 위기적인 청년일수록 오히려 정책 이용의 장벽에 직면한다. 반면 아름다운재단 사업은 거리노숙인뿐 아니라 고시원, 달방, 모텔, 여인숙, 타인의 집을 전전하는 청년, 퇴거위기 청년 등 ‘노숙과 노숙위기 사이’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기존 제도가 노숙인으로 확정된 이후에야 개입하거나, 반대로 아직 공식적 노숙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해 온 경계지대의 청년들을 정책적으로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즉 본 사업은 단지 몇 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공공정책의 분절적 대상 기준이 놓치고 있던 현실의 청년들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실천적으로 제시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5) 지원 종료 이후를 고려한 사후관리 연장

전환기 청년을 위한 ‘사후관리 연장’이 필요하다. 현행 지원은 대체로 긴급지원

이나 단기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년기의 자립은 단기간에 완결되지 않으며, 초기 주거안정 이후에도 취업 불안, 건강 악화, 관계 단절, 채납과 부채 문제로 다시 주거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연구 참여자들 역시 단기적인 주거비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주거 안정, 채무 문제 해결, 안정적 일자리 연계,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지원 종료를 일률적으로 설정하기보다 위기 수준과 자립 정도에 따라 기간을 차등화하고, 주거이전 직후·취업 전환기·수급 탈락 위기 등 재위험 시점에 재개입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재노숙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 2. 관계적 안전망을 포함하는 협력체계의 확장

### 1) 사회적 고립 문제를 고려한 관계지원의 제도화

협력체계 안에 ‘관계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서 노숙위기청년의 문제는 가족관계 단절이 곧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단순한 정서적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접근, 임시거처 확보, 긴급 상황 대응, 취업 유지 등 삶 전반의 불안정과 직결된다. 따라서 자립 안전망은 물질적 지원망이자 관계적 안전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료지원 프로그램, 청년 커뮤니티 기반 주거 모델, 또래 멘토링, 사례관리 과정에서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가족과의 관계 복원이 가능한 청년에 대해서는 가족중재나 관계조정 서비스를 연계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새로운 지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단지 ‘정서지원’이 아니라 재노숙을 예방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 제3절 | 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 확장과 사업 발전 방향

### 1. 중앙정부와 공공정책 차원의 제도 개선 과제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노숙위기청년 지원정책은 단기적 생계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주거권 보장에 기반한 통합적 자립 안전망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노숙위기청년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청년정책과 노숙인정책 사이의 공백을 해소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일반 청년정책은 비교적 안정된 청년을, 노숙인정책은 이미 노숙 상태에 진입한 집단을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가장 위태로운 청년들은 양쪽 제도에서 모두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년기본정책, 주거복지정책, 노숙인복지정책을 연결하는 별도의 가이드라인과 사업 체계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위험군 정의, 발굴 기준, 긴급 주거 제공 원칙, 사례관리 기간, 연계 서비스 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주거 위기청년을 위한 지원은 ‘자격 심사 후 지원’ 이 아니라 ‘주거안정 우선 후 조정’ 원칙에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이는 해외의 주거 우선 접근이 시사하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과 주거지원제도에서의 청년 분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부모와 실질적으로 단절된 청년에게 부모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청년 가구 분리 인정 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가정폭력, 학대, 방임, 경제적 착취, 장기 별거, 보호종료, 시설퇴소 등의 사유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입증 책임 역시 청년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기청년에게는 행정서류를 완비하기 전이라도 긴급주거와 긴급생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공적급여 연계를 돕는 방식의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도 접근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부정수급 위험 이전에 생존권 보장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2. 민간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정책적 의미

### 1) 아름다운재단 사업의 효과성과 중요성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은 민간이 공공의 부족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선도한 시범사업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주거위기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긴급 주거지원과 개별 맞춤형 통합지원을 결합하여 실제로 청년들의 주거상향과 생활 안정, 자립 기반 형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거리노숙, PC방, 찜질방, 모텔, 타인의 집 전전 등 불안정·비주거 상태에 있던 청년들이 고시원 등의 긴급주거로 진입하고, 이후 보증금·월세 지원과 주거환경 조성, 상담, 의료·교육·법률 연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민간주거와 공공주거로 이동하는 과정은 이 사업이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자립의 경로를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즉 본 사업의 효과는 단순히 ‘당장의 잠자리 제공’에 있지 않고, 주거를 기점으로 삶의 재조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있다.

### 2) 하우스링 퍼스트적 접근을 한국적 현실에 맞게 실천한 시도

또한 본 사업의 의미는 하우스링 퍼스트의 문제의식을 한국의 청년 주거위기 현실에 맞게 실천했다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물론 사업에서 제공된 주거가 고시원 등 임시적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 의미의 독립주택 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위급한 상황에 놓인 청년에게 우선 안전한 머물 곳을 제공하고, 그 이후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 채무, 취업, 제도 연계, 관계 회복을 도모했다는 구조 자체이다. 이는 ‘주거가 먼저이고, 자립은 그 다음에 가능하다’는 관점을 실천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년에게 주거는 단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수면과 위생, 신체 회복,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 복원, 노동시장 재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주거에서 자립이 시작된다는 점을 현장에서 입증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3) 민간사업이 갖는 정책 실험의 기능

나아가 본 사업은 민간이 공공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동시에, 새로운 제도 모델을 실험하는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공정책은 제도화 과정에서 대상 기준

과 전달 절차가 엄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가장 위기적인 청년이 오히려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비해 민간사업은 보다 유연하게 대상을 발굴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 조합을 설계하며, 제도 밖 청년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아름다운재단 사업은 바로 이 지점을 보여준다. 즉 공공이 아직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위기청년을 발견하고, 긴급주거와 통합사례관리를 결합한 모델을 먼저 실천해 봄으로써, 향후 공공이 제도화해야 할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사업은 단순한 자선적 지원이 아니라, 공공정책 혁신을 견인하는 정책 실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3. 민관 협력을 통한 사업 확장 방향

#### 1) 아름다운재단 사업모델의 구조화와 확산

향후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은 개별 사례 지원을 넘어 공공과의 연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전달체계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민간이 가진 장점은 위기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유연하게 초기 개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며, 공공의 장점은 장기적 급여와 제도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름다운재단 노숙 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의 확장 방향은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를 넘어 모델의 구조화에 둘 필요가 있다. 즉 더 많은 청년에게 같은 방식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청년에게 어떤 조합의 지원이 효과적인지, 어느 시점에서 긴급주거가 필요하며, 사례관리는 얼마나 지속되어야 하는지, 공공자원으로의 연계는 어떤 조건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기평가-위기개입 및 단기 안정화-주거자원의 통합적 제공-사례지원 및 사례관리-사후관리의 단계별 운영 모델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주거 안정성과 서비스 연계 성과, 재위기 예방 정도를 추적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은 향후 다른 재단이나 지역 민간기관, 나아가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실천모형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 2) 통합적 자립 안전망 구축의 방향

종합하면, 노숙위기청년 지원의 핵심 과제는 위기 이후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숙으로 이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주거를 중심으로 소득·건강·관계·고용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립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은 공공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동시에, 주거를 출발점으로 자립의 경로를 설계한 매우 중요한 선도적 시도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긴급주거 제공과 지속적 사례관리의 결합은 청년 주거 위기 대응에서 가장 필요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민간의 실천을 일회적 사업으로 남겨두지 않고, 공공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화 가능한 자립 안전망 모델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

## 참고문헌

---

- 구인희, 김소영. (2012). 노숙 진입의 원인과 과정. 한국사회학, 46(4), 264-293.
- 관계부처합동. (202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https://www.youthcenter.go.kr/youthCommittee/ythCmtPlan01/ythCmtPlan01Main>
- 김강산. (2021).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16), 8-16.
- 김민정. (2023). 주거정책의 양적 확대는 청년 주거빈곤을 완화시켰는가? 한국행정논집, 35(4), 2.
- 김소영. (2016a). 청년노숙 경로에 관한 연구: 노숙진입과 노숙생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 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16-20.
- 김소영. (2016b). 남성 청년의 노숙진입 시기에 따른 노숙 경로. 사회복지연구, 47(4), 151-181. <http://dx.doi.org/10.16999/kasws.2016.47.4.151>
- 김소영. (2017a). 남성 노숙 청년의 성인기 독립 이행 실패와 원가족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9(3), 213-240.
- 김소영. (2017b). 생애과정에 걸친 노숙 위험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장기 불행한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8(1), 143-171.
- 김은빈, & 최은희. (2025, 12월 29일). “이제 20대도 세대분리 돼요”... 청년 자립 가능한 나라로 첫걸음 [세대분리법을 부탁해 ①].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12280035#\\_digitalcamp](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12280035#_digitalcamp)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37호 (2022).
- 보건복지부. (2021).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1~2025).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 이새롬. (2024). 청년층 주거불안정 탈피 및 진입의 영향요인 분석. 지역연구, 40(3), 23-42.
- 이은정, 이은영, 김혜진. (2024).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의 유형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 44(4), 443-468.
- 이정봉. (2021).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149, 1-2.
- 이형기, 김태훈, 유한석, 이승범, 조범수, 진성일, & 한상준. (2019). 홈리스(노숙·가출·가정 밖) 청소년 경로분석을 통한 정책제안. 서울연구원.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20200709-07.pdf>
- 최은영, 이봉조. (2014, 12월 5일).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실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 최은희, 김은빈. (2024, 11월 11일). [단독] 20대 청년 독립 막는 세대분리법, 국민 10명 중 7명 “부적절하다”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⑥].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12280035#\\_digitalcamp](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12280035#_digitalcamp)
- Deleu, H., Schrooten, M., & Hermans, K. (2023). Hidden homelessness: A scoping review and avenues for further inquiry. Social Policy and Society, 22(2), 282-298.

# 노숙위기청년 실태조사 및 아름다운재단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